



2026. 5.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을 중심으로 -

이은경, 박보영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을 중심으로 -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을 중심으로 -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곽보영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강숙자 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관
장강희 공공기관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을 중심으로 -

2026. 5.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04.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요 약 / 1

I. 개 요 / 1

-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
-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3

II. 동반성장협력대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5

- 1. 주요 현황 5
 - 가. 동반성장협력대출 개요 5
 - 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현황 7
- 2. 주요 쟁점 분석 9
 - 가. 동반성장협력대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원 강화 필요 9
 - (1)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유형별 대출 현황 9
 - (2) 주요 기관별 사례 분석 13
 - (3) 소결 19
 - 나.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저하 19
 - (1)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 현황 19
 - (2) 공공기관 간 중복지원 분석_동일지역 내, 발전사 간 중복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21
 - (3) 소결 27
 - 다. 협약서상 동일기업 대출기간(연장), 대출한도 미명시로 일부 기업 장기간 집중
지원 문제 28
 - (1) 협약서상 대출기간(연장) 미명시로 인한 일부 기업 장기간 지원 문제 28
 - (2) 협약서상 대출기간, 동일기업 대출한도 미명시에 따른 일부 기업 장기지원
주요 사례 33
 - (3) 소결 39

CONTENTS

라. 협약서 위반(동일기업 대출 기간 초과)으로 일부 기업 장기지원 문제	40
(1) 협약서상 동일기업 대출 기간의 중요성	40
(2) 협약서상 대출기간 초과 기업 장기지원 사례	40
(3) 소결	45
마. 대출한도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 문제	46
(1) 동반성장협력대출 대출한도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 문제	46
(2)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 부진에 따른 예탁금 유희화 문제	52
(3) 소결	55
바. 대출미공급분 이자 정산 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자 축소 문제	56
(1) 공공기관, 협약은행별 대출미공급분 예치금 이자정산방법 비교	56
(2) 협약은행 예치금 이자수익 과소정산 문제_대출공급액 방식과 대출평균잔액 방식 비교 사례분석	59
(3) 소결	68
사. 협약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공공성 미흡 문제	70
(1) 협약은행으로서의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 실행 현황	70
(2) 기업은행의 협약은행분 지원업체 금리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필요	72
(3) 다수 협약 공공기관에 대출업체 중복추천에 따른 정책목적 훼손 문제	75
(4) 기업은행의 이자정산 산정 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불이익 발생 및 개선 필요	80
(5) 소결	81
3. 결론 및 시사점	82

CONTENTS

Ⅲ.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90

1. 주요 현황	90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개요	90
(1) 설치 목적	90
(2) 자원 및 용도	91
(3) 사업 유형	92
(4) 운영 체계	94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95
(1) 연도별 출연 및 지원현황	95
(2) 유형별 출연 및 지원현황	96
(3) 공공기관 출연현황	97
2. 주요 쟁점 분석	103
가.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개선 필요	103
(1) 성과공유제 개요	103
(2)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개선 필요	106
(3) 다른 지원사업의 효과를 성과공유제로 활용하는 문제	112
(4) 소결	116
나.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118
(1)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 간 중복지원 사례	118
(2) 동반성장협력대출-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 간 중복지원 사례	123
(3) 소결	126
다. 민간자율기획사업 재원의 균형적 배분 필요	127
(1) 민간자율기획사업 개요	127
(2) 민간자율기획사업 재원의 균형적 배분 필요	128



CONTENTS

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필요	131
(1)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개요	131
(2)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표 개선 필요	134
(3)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의 한계	136
(4) 소결	140
마.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기업부담분 지원 문제	140
(1)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 왜곡 가능성	140
(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정책 취지 고려 필요	144
(3) 소결	146
3. 결론 및 시사점	147

요 약

Ⅰ.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단순한 개별 기업지원을 넘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글로벌 경쟁 심화, 산업 구조의 급속한 전환, 디지털·플랫폼 중심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상생협력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
-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은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며, 공공기관은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상생협력기금은 기술개발, 해외 진출, 환경경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본 보고서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단계에서 실제 운영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의도와 목표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 본 분석은 2026년 1월 지정된 3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 및 상생협력기금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기관별 운영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I.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구성 및 방법
II.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문제점과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현황 • 주요 쟁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협력대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원 강화 필요 -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저하 - 협약서상 동일기업 대출기간(연장), 대출한도 미명시로 일부 기업 장기간 집중 지원 문제 - 협약서 위반(동일기업 대출기간 초과)으로 일부 기업 장기지원 문제 - 대출한도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 문제 - 대출미공급분 이자 정산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자 축소 문제 - 협약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공공성 미흡 문제 • 결론 및 시사점
III. 공공기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현황 • 주요 쟁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개선 필요 -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 민간자율기획사업 재원의 균형적 배분 필요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기업부담분 지원 문제 • 결론 및 시사점

II.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현황

□ 동반성장협력대출 개요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 대출 현황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협약기관)과 협약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기업들에게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임
- 2025년 기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하는 32개 공공기관은 동 사업을 통하여 3,597개 중소기업의 9,579억원에 이르는 대출에 대하여 금리를 지원함
 - 협약 공공기관의 수가 2021년 37개에서 2025년에는 32개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자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해지함에 기인함
 - 이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출잔액이 대출한도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대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개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협약 공공기관 수	37	37	37	35	32
협약액(예탁금)	1,049,000	1,220,700	1,013,693	925,676	652,461
대출한도액	1,815,500	1,886,500	1,485,600	1,419,700	1,104,700
대출잔액	1,565,298	1,522,591	1,268,213	1,229,015	957,875
대출지원업체	5,513	6,441	4,312	4,733	3,597

주: 협약 공공기관의 수 등은 증가와 감소의 순액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주요 쟁점 분석 및 개선과제

가. 동반성장협력대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원 강화 필요

(1)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유형별 대출 현황

-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중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비중이 낮음으로 인한 정책효과 저하 우려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와 상생하기 위한 금리지원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추천한 협력업체 지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공공기관이 추천한 협력업체 등(이하 공사 추천업체) 비중은 2021년 39.7%에서 2023년 22.2%까지 감소 후 일부 회복에도 2025년 기준 42.1%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에 반해, 지원요건 충족업체 비중은 같은 기간 60.3%에서 77.8%까지 상승함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유형별 대출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사 추천업체(A)	6,210	4,722	2,913	3,597	4,036
전체 지원업체(B)	15,653	15,226	13,114	12,193	9,579
공사추천기업 비중(C=A/B)	39.7	31.0	22.2	29.5	42.1
지원요건 충족업체 비중(1-C)	60.3	69.0	77.8	70.5	57.9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5년 기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의 경우, 전체 지원업체 대출잔액 중 공공기관 추천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이 30% 이하로 나타남
 - 부산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대상은 협약은행 주도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업체로만 구성되었으며, 공공기관 추천업체는 없음

-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10개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 중인 동반성장협력대출의 대출잔액 중 70% 이상이 은행 주도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대출로 구성되며, 공사 추천업체 대출은 30% 이하임
- 특히, 지원업체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 중소기업이 50% 이상으로, 동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편적 금융지원으로 사업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함
 - 전국 단위의 일자리 창출, ESG 경영,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38.6~63.2%로 평균 50% 이상 차지함
 - 광주전남지역 농업 중심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전국 단위 창업기업 범주를 근거로 서울 소재 세무회계사무소를 추천한 기관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 등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원거리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 이러한 경우, 협력업체를 기반한 상생협력 효과 및 금리지원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게 됨
- 협력업체 기반이 존재하는 공공기관은 공사 추천업체 비중을 확대하여 협력업체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구조적으로 협력업체 기반이 제한적인 기관은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의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범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2) 기관별 주요 사례 분석

□ 공사 추천업체 비중 저조, 산업 연계성 부족 및 중복지원 문제 사례 분석

-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낮은 공공기관이 다수 존재함
 -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한국도로공사는 0.4%, 한국가스공사는 13.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무한 상황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3년 이후 공사 추천업체가 전무하며, 대부분 부산경남 지역 일반 중소기업에 지원함
- 기관 고유 산업 대상 대출 집행 부진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 진흥 목적 기관임에도 실제 대출집행현황은 영화산

업 영위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일반업종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즉, 영화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며, 약국, 병원, 세무법인 등 산업과 무관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다수를 차지함

- 전국 단위 지원에 따른 공공기관 간 일부업체 중복지원 문제 발생으로 정책 효과 저하 발생
 - 예금보험공사는 전국 단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수행 중이며, 전체 지원업체 중 약 20%가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며, 중복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2020년 159개 → 2023년 274개)
 -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지원 대상이 중복됨

나.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저하

(1)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 현황

□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 문제로 정책효과 저하 발생

-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의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보다 많은 기업에게 배분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운영상의 문제로 판단됨
 -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중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업이 2개 이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수는 2021년 이후 협약 공공기관의 감소 등으로 사유로 줄어들고 있으나, 2024년 말 현재 여전히 상당수 기업이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고 있음
 - 특히, 1개 업체가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금리 혜택을 받는 경우도 발생함

[기업은행의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 현황]

(단위: 개)

연도	동일 지원업체의 협약 공공기관 중복선정					
	2개 공공기관	3개 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5개 공공기관	6개 공공기관	합계
2021	546	77	9	2	0	634
2022	592	77	13	3	1	686
2023	582	68	6	2	0	658
2024	485	66	14	0	1	566

자료: 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공공기관 간 중복지원 분석_동일지역 내, 발전사 간 중복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동일지역 내 중복지원 사례_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 간 중복지원

- 예금보험공사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에서 ESG 및 혁신성장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며, 한국가스공사는 대구·경북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두 공공기관과 협약한 기업은행에서 동일 기업 추천하여 중복지원 업체 다수 발생

[2024년 한국가스공사 기준 예금보험공사와 중복지원업체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공사 추천업체	대구경북			합계
		우수기술력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업체 수	1	48	46	3	98
대출잔액	500	10,176	6,664	700	18,040

자료: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발전사 간 중복지원 사례

-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5개 발전자회사 간 동일업체 중복지원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개 이상의 발전자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 비중은 2020년 9.2%에서 2024년에 16.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대출의 59.5%를 3개 발전자회사로부터 동시에 지원받기도 함

[5개 발전자회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업체 중 타 발전자회사 중복 현황]

(단위: 개)

협약은행	중복업체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업은행	타 발전사와 중복 지원	33	38	39	42	54
	전체 지원업체	359	339	343	326	322
	비중	9.2%	11.2%	11.4%	12.9%	16.7%

주: 업체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대출건수와는 차이가 발생함. 즉, 동일 업체가 대출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업체 기준으로는 1건으로 집계함

자료: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원업체 중복지원은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통합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 기관이 협약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
- 특히 동일 협약은행이 다수 공공기관의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업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관리 장치는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된 협약은행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원업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공공기관은 기관 간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통제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협약서상 대출기간, 대출한도 미명시로 일부 기업 장기간 집중 지원 문제

(1) 협약서상 대출기간(연장) 미명시로 인한 일부 기업 장기간 지원 문제

□ 지원업체 대출기간 미명시로 일부 기업 장기간 집중지원 문제

- 금리지원을 제공하는 대출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자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미비는 일부 기업만 금리지원 혜택을 장기간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될 유인을 제공함
- 대출기간 미명시로 협약서가 미흡한 협약은 20개로, 전체 협약의 47.6%임
 - 대출기간이 미명시된 협약에 근거하여 지원 중인 1,313개 업체 중 3년 이상

지원을 받은 업체가 510개(38.8%)이며, 285개 업체는 4년 이상 장기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지원업체에 대한 중장기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공기관이 협약은행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데,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 규모 등 양적지표 중심의 사업실적에만 관심을 두에 따라 대출기간 미명시와 이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조차 못함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상 대출기간 미명시 공공기관의 지원업체 지원 기간 현황]

(단위: 개, %)

구분	6년 초과	5~6년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합계	3년 이상
업체 수	61	93	131	225	297	418	87	1,313	38.8
비중	4.6	7.1	10.0	17.1	22.6	31.8	6.6	100.0	-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협약서상 대출한도 미명시에 따른 일부 기업 장기지원 주요 사례

□ 협약서상 대출한도 미명시에 따른 일부 기업 집중 지원 문제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협약서에 동일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및 지원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협약은행 주도로 선정된 일부 업체에 대해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지고 금리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이자 지원액 중 상위 6개 업체에 대한 지원액이 전체의 77.3%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컨테이너터미널(주) 1개 업체에 대한 지원액이 전체의 3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 단일 업체에 67.9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금리혜택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협약기관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라. 협약서 위반(동일기업 대출 기간 초과)으로 일부 기업 장기지원 문제

- 양적 성과에 치중 및 사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협약서 위반한 대출지원 문제
 - 대출기간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아닌 균형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임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협약서상 지원업체 대출기간은 3년이지만, 이를 초과한 지원업체 수는 2025년 말 기준으로 55개로 전체의 73.3%이며, 한국수자원공사도 지원업체 대출기간(3년)을 초과하여 지원 중인 업체 수는 26개(25.0%)임
 -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협약서상 지원 기간을 1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3년 이상 동일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 중임
 - 이러한 문제점은 ① 협약기관이 동 사업의 정책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없이 지원 규모와 지원업체 수 등 양적인 실적을 중심으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② 협약은행 입장에서의 신규업체 선정 소요 시간과 대출업체 부실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업체 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 필요
 - 일부 기업이 금리지원 혜택을 장기간 유지하는 양도록 지원 기간과 대출한도를 명확히 하고, 일정 기간 후 의무 종료하는 졸업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공공기관은 협약서에 규정된 대출기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의무화 할 필요

마. 대출한도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 문제

(1) 동반성장협력대출 대출한도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 문제

- 대출한도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으로 낮은 정책효과 문제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금융 접근성 제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출한도액까지 대출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25년 기준으로 미공급률이 높은 11개 협약의 최근 5년 동안 대출미공급 비율을 살펴본 결과, 미공급률은 2024년 68.4%, 2025년 70.2%까지 확대되고 있음
 - 공영홈쇼핑의 경우 2023년 이후 예약금 200억원, 대출한도 300억원 규모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금액은 2023년 26.6억원, 2024년 16.4억원, 2025년 13.7억원에 그쳐, 대출한도 대비 미실행대출 비중이 각각 91.1%, 94.5%, 95.4%에 달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기존 지원업체 중심으로 지원이 지속되고, 2025년도 신규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미공급 비율이 2021년 53.1%, 2022년 63.3%, 2025년 48.2%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어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이렇듯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금 규모 조정이나 협약 조건 개선 등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지원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함
- 공공기관은 대출 수요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예약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예약금 축소, 협약 구조 개선, 지원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시행할 필요

[지원업체 대출미공급액이 20% 이상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약금	100,500	102,500	97,500	48,500	39,500
대출한도(a)	176,500	180,500	171,500	71,500	56,500
대출공급액	91,803	80,823	107,580	22,595	16,840
미공급금액(b)	84,697	99,677	63,920	48,905	39,660
미공급대출 비중(b/a)	48.0%	55.2%	37.3%	68.4%	70.2%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 부진에 따른 예탁금 유휴화 문제

- 대출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유지한 결과,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하여 예탁금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휴자금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대출한도 대비 대출실적이 저조하여 협약을 통해 조성된 예치금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협약 은행 정기예금으로 유휴자금화되어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음
 - 2025년 말 기준 협약이 종료된 한국공항공사(하나은행)는 5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52.1%로 나타나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운영되지 못함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재무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출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유지된 결과 동 사업이 협력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운영은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비해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인 구조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효율성과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동시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재무 여건과 대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탁금 규모의 적정성을 설정하고,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탁금 축소, 협약 조건 조정, 사업 구조 개편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동 사업용 예탁금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바. 대출미공급분 이자 정산 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자 축소 문제

(1) 공공기관,협약은행별 대출미공급분 예치금 이자정산방법 비교

- 대출미공급분에 대한 이자정산 정산방식 비교
 - 공공기관과 협약은행 간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동 프로그램은 협약 종료 시점에 예치 재원에 대한 정산 절차를 두고 있으며, 협약 종료 시 실제 이자지원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대출미공급분에 대한 이자액이 정산 대상이 됨

- 모든 협약은행에서 정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대출 미공급액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해당 금액의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함
 -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미공급액(대출한도액 - 대출공급액)을 산정할 때, 대출공급액을 단순 누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신규 대출실행 시점이나 중도상환 발생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반영
 -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및 부산은행은 대출 미공급액을 산정할 때, 신규 대출 및 중도상환에 따른 기간을 반영한 평균잔액 개념을 적용

[협약은행·공공기관별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이자정산 방식 비교]

구분	적용은행	이자정산 대상	① 대출 미공급액 산정방식	③ 대출공급액 산정 방식			
				신규대출	중도상환	만기연장	특징
단순 방식	기업은행 등 35개	① 대출 미공급액 중 예탁금 해당액	② 대출한도 - ③ 대출공급액	전액 반영	전액 반영	전액 반영	시점 고려 없음
평잔 방식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5개		대출한도 - 평균잔액 기준 대출공급액	실행일 ~ 종료일 평균잔액	실행일 ~ 상환일 평균잔액	실행일 ~ 만기일 평균잔액	실제 운용 기간 반영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협약은행 예치금 이자수익 과소정산 문제_대출공급액 방식과 대출평균잔액 방식 비교 사례분석

- 한국공항공사 사례 : 대출공급액이 한도액에 미달하여 이자정산액이 발생한 경우
 - 신규대출과 상환액의 실행과 상환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 정산방식(당초 이자정산액)과 평균잔액 개념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이자정산액(추정 이자정산액)을 비교함
 - 평균잔액은 신규대출일과 상환일을 일수 계산한 평균잔액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전액을 대출공급액에 포함하는 것보다 대출잔액이 감소하여 이자정산 대상이 되는 대출미공급액이 증가함

- 추정 이자정산액은 당초 이자정산액 대비 약 1.81~11.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협약 체결 시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 및 이자 정산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적정 수준의 이자정산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협약은행에 동 이자분이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함

[한국공항공사의 기업은행 이자정산액 및 하나은행 방식 적용 시 추가 추정이자 정산액]
(단위: 원, 배)

구분	2021	2022	2023	2024
대출공급액	7,600,000,000	7,575,000,000	6,595,000,000	7,695,000,000
대출평균잔액	3,145,726,027	6,025,273,973	4,099,575,342	5,423,886,027
당초 이자정산액(a)	1,700,000	4,037,500	27,402,119	22,040,000
추정 이자정산액(b)	18,930,664	14,722,397	49,658,951	38,356,592
추가 추정이익정산액(b-a)	17,230,664	10,684,897	22,256,832	16,316,592
b/a	11.14	3.65	1.81	1.74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가스공사 사례 : 대출공급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당초 이자정산액이 “0”원인 경우
- 기업은행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총 대출한도 중 대출 미공급분에 대해 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이자를 산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대출 미공급분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실질적으로 신규 대출 실행시점이나 중도상환일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대출공급액에 반영함으로써, 예치금에서 차감되는 대출공급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구조로 운영됨
 - 최근 3년 동안 대출공급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자정산액은 “0”원임

[한국가스공사(기업은행)의 협약기간 중 전체 대출한도액 및 대출공급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전체 대출한도액	150,000	150,000	150,000
전체 대출공급액	194,037	165,739	163,433
이자정산액	0	0	0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하지만, 협약 시작일 이후 신규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 평균잔액은 대출공급액의 약 25.3~57.1% 수준에 그침에 따라 대출미공급액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이자정산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협약기간 중 실제 대출 실행 기간을 반영할 경우 대출 미공급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정산액이 과소 산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한국가스공사(기업은행)의 협약기간 중 신규지원업체 대출공급액 vs 대출평균잔액]

(단위: 원)

구분	2023	2024	2025
대출공급액(a)	39,152,700,000	20,235,970,000	25,601,000,000
대출평균잔액(b)	9,856,030,137	8,139,222,904	14,614,854,795
차이금액(c=a-b)	29,296,669,863	12,096,747,096	10,986,145,205
b/a(비중)	25.2%	40.2%	57.1%
예탁이율(d)	2.47%	3.64%	3.59%
과소지급 이자추정액(c× d)	723,627,746	440,321,594	394,402,613

주: 연도별 협약일 이후 신규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공급액과 대출평균잔액을 비교함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대출미공급분에 대한 이자수익 과소정산 발생 및 개선 필요

- 기업은행 방식의 현행 이자정산은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이자수익이 협약은행 이익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이자정산액이 수 배 이상 차이를 보이거나, 대출 평균 잔액 기준에서는 대출 미공급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누적 방식에서는 대출공급액이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정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
- 따라서, 신규 대출 실행일 및 중도 상환일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누적 방식은 이자정산액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기간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등 이자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사. 협약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공공성 미흡 문제

(1) 협약은행으로서의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 실행 현황

- 기업은행이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을 시작한 2009년 협약 대기업 수 20개 기업, 예탁금 2,040억원에서 이후 규모가 확대되어 2025년 말 기준으로 총 201개 협약기업의 4조 1,322억원에 이르는 예탁금을 운용 중임
 - 동 예탁금을 재원으로 2025년 말 기준으로 9조 44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6조 8,903억원임
-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 실행 현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의 41개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 중 31개 협약이 기업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활용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31개 협약을 통하여 2025년 말 기준 총 5,760억원의 예탁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9,602억원의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총 2,892건, 약 7,750억원 규모의 대출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함

(2) 기업은행의 협약은행분 지원업체 금리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필요

-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단순한 자금 운용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협력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
-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평균잔액[(기초잔액+기말잔액)/2]에 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은행은 2021~2024년 동안 최대 약 523억원 수준의 이자수익 혜택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관련 순이자마진 추정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합계
기업은행 이자수익 혜택 추정액(a=b×c)	12,371	15,651	13,922	10,396	52,339
예탁금 평균잔액(b)	819,260	879,260	777,750	615,138	-
순이자마진(NIM)(c)	1.51	1.78	1.79	1.6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기업은행은 협약 공공기관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탁고를 확보하고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실행하는 핵심 협약은행으로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음

(3) 다수 협약 공공기관에 대출업체 중복추천에 따른 정책목적 훼손 문제

- 기업은행이 다수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일 기업에 대해 중복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구조로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 중임
-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복지원 비율은 일부 감소 추세이지만,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 수는 2020년 829개에서 2024년 1,22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은행의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선정업체 현황]

(단위: 개)

구분	1개	중복선정업체						합계
		2개	3개	4개	5개	6개	소계	
2020	4,626	698	114	12	5	0	829	5,455
2021	7,313	1,042	216	24	10	0	1,292	8,605
2022	7,720	1,178	228	52	15	6	1,479	9,199
2023	9,437	1,158	204	24	10	0	1,396	10,833
2024	9,508	970	195	56	0	6	1,227	10,735

자료: 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협약은행이 기업은행으로 동일한 5개 발전자회사 간 지원업체 중복 문제와 대구 경북지역 내 지원업체를 중복추천함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중복지원 문제 등도 발생함
- 기업은행이 이러한 중복지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협약은행으로서의 책임 이행이 미흡함
- 따라서 기업은행은 중복 선정 방지 시스템 구축하여 모든 협약 공공기관의 지원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지원업체 선정 시 중복 여부를 자동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4) 기업은행의 이자정산 산정 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불이익 발생 및 개선 필요

- 기업은행은 단순 누적 방식으로 대출공급액을 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중 대출미공급분에 대한 이자정산액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 금융기관이 예금 및 대출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원금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 실행일이나 중도상환일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공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미공급분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함
-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에 있어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대출 실행일 및 중도상환일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의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등 이자정산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3. 결론 및 시사점

- 동반성장협력대출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원업체 선정
관여 및 전국 단위 일반 중소기업 위주 지양 필요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본래 공공기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임
 - 실제 운영에서는 전국 단위 일반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 기관 고유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취지가 약화됨
 -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원업체 선정에 적극 관여하고, 협력업체 중심의 지원 확대 필요
 - 더불어 공공기관 고유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생협력 효과 제고 노력 필요
- 공공기관 간 지원업체 정보 공유 및 협약은행 관리 강화를 통한 중복지원 방지 필요
 - 동일 기업이 여러 협약기관으로부터 동시에 금리지원을 받는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 한정된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지원 기회의 분산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간 지원업체 중복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 수는 2020년 829개에서 2024년 1,227개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지원업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이 중복지원 관리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 명확화와 협약 준수 관리 강화를 통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 필요
 - 대출기간은 특정 기업에 대한 장기·반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 기회의 순환을 유도하는 기준이며, 대출한도는 개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통제 장치임

- 전체 41개 협약 중 20개(58.5%)가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체 지원업체 중 3년 이상 장기 지원 비중이 38.3%에 달하고 일부 기관은 70%를 상회하는 등 장기·반복 지원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확인
- 공공기관은 협약서에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 대출한도 대비 공급실적 제고 및 수요 기반 한도 설정을 통한 사업 실효성 강화 필요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대출한도 대비 실제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은 협력기업의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대출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한도 조정,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개선 등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예탁금 운용 효율화 이자지원금 방식 전환을 통한 재정 운용의 적정성 제고 필요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예탁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하여 예탁금이 금융지원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유휴자금으로 남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대출한도 대비 미공급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일부는 80% 이상에 이르는 등 대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됨
 - 현행 예탁금 중심 운영방식이 실제 대출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채 자금이 선투입되는 구조에 기인함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 자원 운용방식은 예탁금 전액을 사전에 예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대출 실행 규모에 연동하여 필요한 이자지원 재원만을 산정·예치하는 “이자지원금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
- 대출미공급분 이자 정산 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자 수익 불이익 개선 필요
 -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협약은행에 예탁한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협약 종료 시 또는 협약기간 중 대출 미

공급분에 대한 이자정산이 이루어짐

- 협약은행 중 기업은행은 협약기간 중 신규 대출 실행일이나 중도상환일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누적 기준의 대출공급액을 적용하여 이자정산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령할 이자정산액을 체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공공기관은 향후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는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신규 대출 실행일 및 중도상환일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의 산정 방식을 표준적으로 적용할 필요

□ 협약은행(기업은행)의 공공성 강화 및 정책금융 수행 책임 제고 필요

-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 확대 노력 부족, 중복지원 관리 미흡, 이자정산 구조의 불합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함
-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정책금융 수행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공공기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

Ⅲ. 공공기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공공기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주요 현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개요

-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임
 - 기금의 용도는 대·중소기업 간 ①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② 기술협력 촉진 사업, ③인력교류 확대 사업, ④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⑤임금 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임
-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재원 구성은 기금 100%, 기금과 정부 예산, 또는 기금·정부 예산·중소기업 부담금으로 사업에 따라 상이함

[상생협력기금사업의 재원 구성별 현황]

재원 구성	사업명
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성과공유제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민간자율기획사업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력사 ESG 지원사업
상생협력기금-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민관공동협력 창의트랙사업
	민관공동협력 공급망 ESG 지원사업
상생협력기금 -정부-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사업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민관공동협력 영세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자료: 상생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조성액은 2025년 말 기준 3조원을 넘어섰고, 누적 출연기업은 492개로 확대되는 추세임. 누적 지원금액은 2025년 2조 8,98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85만 1,187개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상생협력기금의 연도별 출연·지원 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연	누적 금액	18,330	22,693	26,563	28,887	31,618
	(순증)	(3,683)	(4,363)	(3,870)	(2,324)	(2,730)
	누적 기업 수	335	386	417	441	492
	(순증)	(61)	(51)	(31)	(24)	(51)
지원	누적 금액	15,363	18,789	23,151	25,991	28,986
	(순증)	(2,574)	(3,426)	(4,362)	(2,840)	(2,995)
	누적 기업 수	268,728	422,217	577,456	725,088	851,187
	(순증)	(110,482)	(153,486)	(155,239)	(147,632)	(126,099)

주: 1. 2025. 12. 31. 누적 기준

2. 출연기업 수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수, 지원기업 수는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수를 말함

자료: 상생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의 경우 2025년 기준 111개 기관이 출연하였고, 출연액은 394억 원임

- 출연 공공기관 수는 2021년 87개에서 2025년 11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액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25년에 다시 증가하였음

[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출연 공공기관 수 및 출연액]

(단위: 개,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기관 수	87	94	95	106	111
금액	539	401	352	321	394
(전년대비 증감율)	-	△25.6	△12.2	△8.8	22.7

주: 1. 2026년 1월 지정된 3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부설기관 제외)

2. 예산이 아닌 임직원들의 모금 등으로 출연한 공공기관을 포함함

자료: 상생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각 기관별 출연액은 100만원 미만부터 10억원 이상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출연금 394억원 중 10억 원 이상을 출연한 기관이 17곳(312.7억원)으로 출연액 대부분이 소수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1억원 미만 구간은 금액 비중은 낮지만 총 68개 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전체 참여기관의 60% 이상을 차지함

[2025년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분포]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합계
공공기관 수	17	26	14	40	14	111
금액	31,270	7,645	346	119	7	39,387
(비중)	(79.4)	(19.4)	(0.9)	(0.3)	(0.0)	(100.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주요 쟁점 분석

가.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개선 필요

- 성과공유제란 위탁·수탁기업 간 사전에 약속된 공동의 혁신 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임
- 성과공유과제의 모델은 협력유형에 따라 ①신제품·신기술 개발, ②해외동반 진출, ③기술이전, ④공정개선, ⑤성능개선, ⑥원가절감, ⑦관리 시스템개선, ⑧서비스 용역개선¹⁾으로 구분됨

- 일부 공공기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 통상적인 계약 이행 결과를 성과로 보아 현금 배분의 형태로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인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기관의 다이어리 및 달력 제작업체와 계약기간 내 제작이라는 성과 목표로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용역계약업체와의 통상적인 계약 이행을 성과로 보아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일부 공공기관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를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목표 달성 여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됨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품질 80점 달성’으로 설정하고, 한국연구재단도 ‘내부 임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 80점 이상 달성’을 과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목표 달성이 용이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큼
- 상생협력기금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와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되는 결과를 성과공유 과제의 목표로 설정하는 사례가 확인됨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10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기업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하여 기업당 1,220만원을 현금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음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각각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과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의 대상기업과 성과공유제를 체결하여 해당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달성된 목표에 대하여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함
-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제도의 형식적인 참여에서 벗어나 유의미한 성과의 창출과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는 제도의 전 과정에 대한 등록·확인 및 심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1) 「성과공유확인제 운영지침 개정」(2026. 4. 1.)으로 해당 유형 삭제됨

나.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 일부 공공기관에서 동일 연도 내 특정 기업에 다수의 상생협력기금사업을 지원하거나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사업을 중복지원한 사례가 확인됨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업체 중 4개의 업체는 5개 사업, 2개의 업체는 4개의 사업, 3개의 업체는 3개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각각 6개 및 5개 업체가 3개 이상의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에서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사업 간에도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사례가 확인됨
- 상생협력기금사업과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일부 기업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구조는 한정된 공공재원의 배분이 특정 기업군에 편중되어 정책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동반성장 효과의 확산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간 중복지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의 다변화·신규 참여 기업의 발굴 및 참여 유인 강화를 통해 보다 폭넓은 기업이 정책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필요

다. 민간자율기획사업 재원의 균형적 배분 필요

- 민간자율기획사업이란 출연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상생협력활동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임
 - 기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①기술협력 촉진, ②인력교류확대, ③환경경영협력 촉진, ④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⑤생산성 향상, ⑥기술 보호, ⑦창업 지원, ⑧국내·외 판로 확대, ⑨거래 공정화, ⑩동반성장문화확산으로 구분
- 공공기관이 2024~2025년 민간자율기획사업으로 집행한 내역을 용도별로 구분해보면, 판로확대 분야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지원이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문화확산 등 근로자 복리증진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장려금·격려금·포상금 등 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한 일회성·시혜성 지원은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지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공기관별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발굴할 필요

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상생협력기금사업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의 지표가 양적 집행 실적 중심으로 편중되어, 해당 지원이 동반성장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지원사업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경영성과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와 효과 중심의 평가체제로 보완될 필요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의 상생협력기금 사업별 평가 지표]

사업명	평가지표(세부지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상생협력)	· 시장확대형-상생협력(공동R&D) 과제발굴 건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신규 중소기업 국내 판로지원 실적 ·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실적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수 및 지원금액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실적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 창업벤처기업 지원 기업 수
성과공유제	· 성과공유과제 등급 · 성과공유과제 확인 실적 · 성과공유금액
민간자율기획사업	· 협력(거래)중소기업 임직원 훈련교육지원 실적 · 협력(거래)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지원 실적 · 기술자료 임치계약 지원 실적
협력사 ESG 지원사업	· 중소기업 ESG 지원 실적

자료: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 체감도 조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활동의 만족도와 체감 효과를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로, 설문 기반의 특성상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에 의존하게 되고, 공공기관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응답이 우호적 또는 중립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평가항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설계하여 응답자의 주관성을 완화하고, 표본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표본 수를 확대하는 등 응답의 편향과 왜곡을 줄일 필요가 있음

마.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기업부담분 지원 문제

- 일부 공공기관은 상생협력기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내일채움공제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음
- 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휴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납입금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대체되어 기업의 의지와 노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고, 일부 공공기관의 협력사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전제로 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 및 대상선정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성과공유제가 과제의 질적 수준과 성과 창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유의미한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공유제확산추진 본부의 등록 및 검증 역할의 충실한 이행 필요
- 상생협력기금사업과 동반성장협력대출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의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지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의 다양화 도모, 신규 참여 기업을 발굴·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의 민간자율기획사업이 단기적·시혜적 지원에 편중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전문성을 활용한 중장기적 과제의 기획과 발굴 필요
- 상생협력기금사업을 평가하는 지표가 성과와 효과 중심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주관성을 완화하고 응답 편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
- 상생협력기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내일채움공제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기업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될 필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 심화, 산업 구조의 급속한 전환, 디지털·플랫폼 중심 경제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단순한 개별 기업지원을 넘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확산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의 환류 경로를 강화하는 등 상생협력 생태계의 확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상생협력이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은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상생협력기금은 기술개발, 해외 진출, 환경경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이러한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기관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책적 책무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상생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적 파급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방식은 단순한 자원 집행을 넘어 상생협력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상생협력정책과 관련한 분석은 주로 정부 부처 차원의 계획 수립이나 예산 배분, 법·제도적 설계와 같은 거시적·정책적 차원에 집중된 반면, 본 보고서는 정책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집행단계에서 실제 운영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의도와 목표가 현장에서 충분히 실현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과제와 한계를 토대로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개선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운용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반성장협력대출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의 주요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주요 쟁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별 분석내용을 수록하였다.

주요 쟁점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전수조사하여 첫째, 공공기관 간 중소기업의 중복지원 여부, 둘째, 협약서상 대출기간, 대출한도 준수 여부, 셋째, 대출한도액만큼 대출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예탁금의 유희화 문제는 없는지, 넷째, 대출미공급분에 대하여 이자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섯째, 주된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협약은행의 역할을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등 동반성장협력대출 전반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상생협력기금의 전반적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상생협력기금의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성과공유제 관련 문제점(성과공유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사례, 다른 지원사업의 성과를 성과공유 과제로 활용하는 사례)을 분석하였다. 셋째,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넷째, 민간자율기획사업 내 용도별 비중을 검토하여 균형적 재원 배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상생협력기금사업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개선방안과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의 한계점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내일채움공제사업과 근로자 휴가비지원 사업)의 기업부담금 지원구조와 관련하여 정책 취지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본 분석은 2026년 1월 지정된 3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동반성장협력대출 및 상생협력기금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기관별 운영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 보도자료, 정책자료 및 각종 공식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하여서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통계자료, 사업 설명자료, 관련 지침 등을 제공받아 참고하였다.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Ⅰ.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구성 및 방법
Ⅱ.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문제점과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현황 • 주요 쟁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협력대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원 강화 필요 -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저하 - 협약서상 동일기업 대출기간(연장), 대출한도 미명시로 일부 기업 장기간 집중 지원 문제 - 협약서 위반(동일기업 대출기간 초과)으로 일부 기업 장기지원 문제 - 대출한도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 문제 - 대출미공급분 이자 정산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자 축소 문제 - 협약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공공성 미흡 문제 • 결론 및 시사점
Ⅲ. 공공기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현황 • 주요 쟁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개선 필요 -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 민간자율기획사업 재원의 균형적 배분 필요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기업부담분 지원 문제 • 결론 및 시사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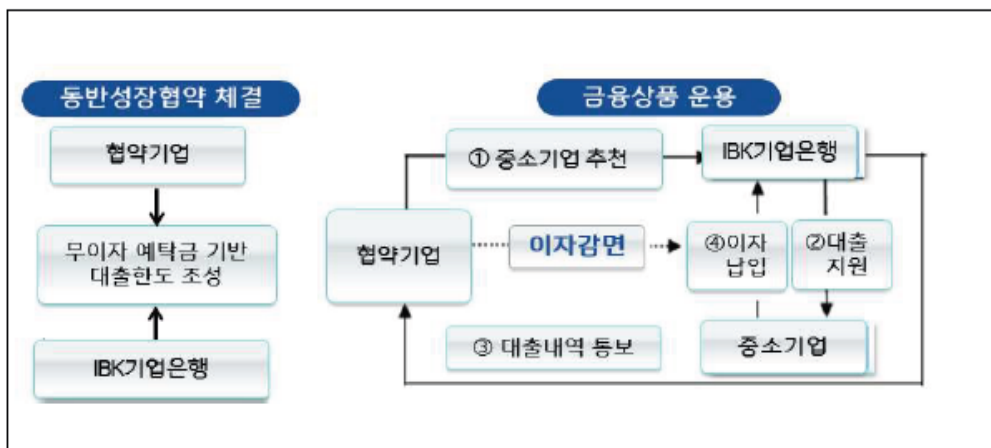
주요 현황

가. 동반성장협력대출 개요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협약기관)과 협약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중소기업들에게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여신상품의 하나로 은행의 일반적인 여신심사 절차를 따르게 된다. 다만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여신대상은 「대·중소기업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한다.

한편,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먼저 협약기관과 협약은행 간에 동반성장협력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수행한다.

[동반성장협력대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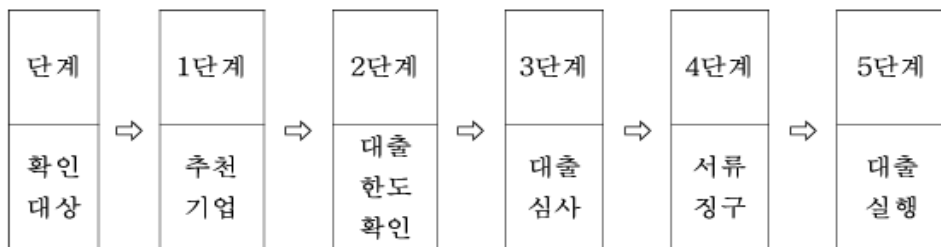


자료: 기업은행

협약기관은 자금지원 대상이 될 중소기업을 선정하거나 추천하며, 일반적으로 협약기관의 협력업체, 기술력 보유기업, ESG 기업 등이 대상이 되며, 해당 기업이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대상 후보로 지정된다. 이후 협약은행은 협약기관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도, 재무상태,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결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금리 조건의 대출이 실행되며, 이때 협약기관이 제공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재원을 활용하여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사실상 협약기관이 받을 이자를 협력 중소기업의 금리 인하분으로 양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협약기관의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협약은행이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 중소기업 자금대출보다 대출금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절차]



이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은 협력 중소기업이 시중보다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경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다. 협약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의 재무건전성이 좋아짐에 따라 부품 공급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공공기관 등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등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협약은행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우량 고객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검증된 중소기업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여신 운영이 가능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현황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 협약은행에 예탁금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이 제도는 신용도 및 담보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협약은행에 일정 규모의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이 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추천하거나 은행이 선정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일부를 포기하여 금리 인하 재원을 제공하고, 협약은행은 이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시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 규모와 참여 공공기관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먼저, 협약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수를 보면 2021~2023년 동안 37개 기관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35개, 2025년 32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업의 운영 기반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약액(예탁금)은 2021년 1조 490억원에서 2022년 1조 2,207억원까지 증가한 후 2023년 1조 137억원, 2024년 9,257억원, 2025년 6,52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1,000억원)와 한국주택금융공사(1,512억원) 등이 자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탁금을 해지하면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대출한도 또한 협약액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2022년 1조 8,877억원을 정점 이후 2025년 1조 1,047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잔액도 2021년 1조 5,652억원에서 2025년 9,57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원업체 수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5,513개에서 2025년 3,597개로 줄어들었으며, 2024년 일시적인 증가를 제외하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개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협약 공공기관 수	37	37	37	35	32
협약액(예탁금)	1,049,000	1,220,700	1,013,693	925,676	652,461
대출한도액	1,815,500	1,886,500	1,485,600	1,419,700	1,104,700
대출잔액	1,565,298	1,522,591	1,268,213	1,229,015	957,875
대출지원업체	5,513	6,441	4,312	4,733	3,597

주: 협약 공공기관의 수 등은 증가와 감소의 순액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동반성장협력대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협력업체 지원 강화 필요

(1)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유형별 대출 현황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은행에 예치하는 예탁금을 기반으로 은행이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력기업의 기술개발·운전자금·설비투자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협약서에 명시한다. 협약서에 따라 ① 공사가 직접 추천한 협력업체(이하 공사 추천업체)와 ② 일자리 창출기업, ESG 영위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창업 및 벤처기업 등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협약은행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중 공사 추천업체는 공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지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지원업체를 크게 공사 추천업체와 지원요건 충족업체로 구분하고, 지원요건 충족업체는 다시 지역 소재 업체,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분석 결과,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와 상생하기 위한 금리지원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은행이 선정한 지원요건 충족업체의 비중은 2021년 60.3%에서 2023년 77.8%까지 증가한 반면, 공사 추천업체의 비중은 동 기간 39.7%에서 22.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후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에 분포하는 일자리창출기업, ESG 경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의 38.6~62.2% 수준으로,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보편적 금융지원 형태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대상에 전국 단위 창업기업과 코로나19 피해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서울 소재 세무회계사무소가 2020~2022년 동안 창업기업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원거리 업체에 대한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 파악 및 관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금리혜택의 정책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측정에 한계가 존재한다.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유형별 대출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사 추천업체(A)			6,210	4,722	2,913	3,597	4,036
지원 요건 충족 업체 (B= a+b +c)	지역 소재(a)		2,545	3,363	2,039	2,004	1,846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b)		460	16	17	59	203
	기타 (c)	코로나19 피해 기업	2,833	2,835	1,600	956	290
		동일 업종 영위	157	191	175	170	159
		일자리 창출 기업	1,545	1,528	1,599	1,658	517
		ESG 경영 중소기업	889	1,005	2,100	1,449	959
		창업 및 벤처기업	185	211	165	178	283
		기타	829	1,357	2,507	2,122	1,287
		소계(c)	6,438	7,126	8,146	6,533	3,494
합계(C=A+B)		15,653	15,226	13,114	12,193	9,579	
공사추천기업 비중(A/C)		39.7	31.0	22.2	29.5	42.1	
지원요건 충족업체 비중(B/C)		60.3	69.0	77.8	70.5	57.9	
전국 단위 지원업체 비중((b+c)/C		44.1	46.9	62.2	54.1	38.6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다음의 표는 2025년 말 기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지원업체 중 공사 추천업체와 일자리 창출, ESG 경영 등의 지원요건 충족업체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이다.

공사 추천업체가 전혀 없는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이며,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30% 이하인 기관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1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32개 기관 중 51.6%인 16개 기관에서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30%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가 전국 단

위로 폭넓게 선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중소기업에 범용적금융지원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반성장협력대출 중 공사 추천업체 지원 비중 현황]

(단위: %)

공공기관	공사 추천 업체	지원요건 만족 업체	합계
공영홈쇼핑	100.0	0.0	100.0
국가철도공단	53.4	46.6	100.0
부산항만공사	0.0	100.0	100.0
여수광양항만공사	5.8	94.2	100.0
예금보험공사	0.0	100.0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78.8	21.2	100.0
인천항만공사	0.0	100.0	100.0
한국가스공사	11.8	88.2	100.0
한국공항공사	100.0	0.0	100.0
한국관광공사	0.0	100.0	100.0
한국남동발전	80.0	20.0	100.0
한국남부발전	29.8	70.2	100.0
한국농어촌공사	12.2	87.8	100.0
한국도로공사	1.6	98.4	100.0
한국동서발전	27.7	72.3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100.0	0.0	100.0
한국서부발전	96.8	3.2	100.0
한국수력원자력	100.0	0.0	100.0
한국수자원공사	100.0	0.0	100.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0.0	0.0	100.0
한국언론진흥재단	16.0	84.0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0.0	100.0	100.0
한국전기안전공사	9.9	90.1	100.0
한국전력거래소	96.7	3.3	100.0
한국전력기술	100.0	0.0	100.0
한국조폐공사	30.0	70.0	100.0
한국주택금융공사	0.0	100.0	100.0
한국중부발전	84.7	15.3	100.0
한국지역난방공사	58.8	41.2	100.0
한국철도공사	62.4	37.6	100.0
한전KPS	70.8	29.2	100.0
한전KDN	8.2	91.8	100.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낮은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항만SOC 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배후단지 입주기업, 항만물류업, 토목건설업 등 관련 협력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은행 중심으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지원 대상이 선정됨에 따라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상 직접적인 협력업체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혹은 전국 단위의 일자리 창출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사회적 기업, ESG경영 기업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타 공공기관과의 지원업체 중복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다소 범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등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협약은행 주도의 대상 선정이 지속될 경우, 공공기관 고유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정책사업으로서의 차별성과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정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즉, 협력업체 기반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사 추천업체 비중을 확대하여 협력업체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구조적으로 협력업체 기반이 제한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의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범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공공기관의 고유한 협력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기업까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동 사업의 정책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기관 간 중복지원 및 관리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지원은 개별 기관별로 분산 운영하기보다, 별도의 통합된 기준과 체계 하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기관별 사례 분석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함에 있어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낮고, 전국 혹은 지역 단위의 일반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는 정책목적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①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낮은 사례, ② 기관 고유 산업과의 관련성이 낮은 사례, ③ 전국 단위 지원 대상의 타 공공기관과의 중복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낮은 공사 추천업체 비중 사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25년 말 기준으로 726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금리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중 공사 추천업체 비중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53.9%, ESG 인증업체, 저출산 대책 우수업체 등 전국 단위 기업이 46.7%를 차지하는 등 99.4%가 협약은행 선정 기준에 따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기술력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 추천업체는 13.2%에 그쳤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추천업체가 2025년 말 기준 전무한 상황으로, 지원업체는 대부분 부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지원업체 중복 주요 공공기관 지원유형별 대출공급 잔액 현황]

(단위: 원, %)

공공기관	지원유형		대출공급잔액	비중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지역	일자리창출기업	19,620,000,000	27.0
		창업업체	18,790,000,000	25.9
	ESG 인증업체		29,212,000,000	40.2
	저출산 대책 우수업체		4,700,000,000	6.5
	공사 추천업체		300,000,000	0.4
	합 계		72,622,000,000	100.0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 지역	우수기술력기업	77,877,000,000	50.1
		일자리창출기업	56,855,200,000	36.6
	공사 추천기업		20,568,000,000	13.2
	합 계		155,300,200,000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경남 지역	창업벤처중소기업	2,780,000,000	20.4
		일자리창출기업	0	0.0
		코로나19 피해기업	3,540,000,000	26.0
		친환경 중소기업	3,756,000,000	27.6
		ESG경영 추진 중소기업	3,538,000,000	26.0
	공사 추천기업(사회적기업 포함)		0	0.0
	합 계		13,614,000,000	100.0

주: 2025년 말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년부터 100억원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하여 2025년 말 기준 116개 기업, 136억원의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연도	협약은행	예탁금	예탁이율	대출한도	지원 대상업체	대출잔액
2021	기업은행	10,000	12개월 KORIBOR 금리 - 연 0.2%p	10,000	53	9,559
2022					65	9,943
2023					108	9,986
2024					98	9,665
2025					116	13,614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러나, 공사 추천업체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사회적 기업 1개 업체(3억원)에 대한 지원에 그쳤고, 2023년 이후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현저히 낮은 구조에서는 공공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일반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당초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괴리가 있으므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금리지원 등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동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형태별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원형태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산·경남 지역	창업·벤처중소기업	1,365	1,565	320	130	2,780
	일자리 창출 기업	1,030	1,000	200	200	0
	코로나19 피해기업	6,864	7,079	9,466	9,335	3,540
	친환경 중소기업	0	0	0	0	3,756
	ESG경영 추진 기업	0	0	0	0	3,538
공사추천기업(a)		300	300	0	0	0
대출잔액 합계(b)		9,559	9,943	9,986	9,665	13,614
공사 추천업체/대출잔액		3.1	3.0	0.0	0.0	0.0

주: 공사추천기업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회적 기업 포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② 영화진흥위원회 사례 : 기관 고유 산업 대상 대출 집행 부진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관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21~2022년 동안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하였으며, 총 100억원(위원회 및 은행 각 5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① 위원회가 추천한 영화산업 영위 중소기업과 ② 위원회가 추천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각각 50억원의 한도를 배정하고 대출 지원 및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화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금리지원 비중은 20.6~23.6%에 그쳤고, 일자리 창출 추천기업이 76.4~79.4%를 차지하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은 약국, 세무법인, 요양병원, 내과, 의원 등 영화산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²⁾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산업적 특성과 연계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동반성장협력대출이 기관 고유 산업과 무관한 일반 기업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동 정책 목적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진흥위원회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유형별 대출 지원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원유형	2021		2022	
	대출공급잔액	비중	대출공급잔액	비중
영화산업 영위 기업	1,500	23.6	1,200	20.6
일자리 창출 추천기업	4,849	76.4	4,619	79.4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③ 예금보험공사 사례 : 전국 단위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중복지원 및 정책효과 저해

예금보험공사는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 대상을 전국 소재 중소기업으로 설정하

- 2) 이와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는 세한 영화업체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원금 보전 의무가 있는 한시적 재원을 활용해야 했던 사업 여건상, 대출 심사 요건 완화나 금리 감면 폭 확대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K-뉴딜, 녹색인증기업, ESG 경영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상 지원 대상 및 지원 현황]

연도	지원 대상	비고
2021	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②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전국 소재 중소 기업
2022	③ K-뉴딜 관련 품목 영위 중소기업	
2023	① ESG 자가진단 완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② 「혁신성장 공동기준」 9개 테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친환경 품목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	
2024	③ 녹색기술 인증기업	
2025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변경)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와 같이 전국 단위 중소기업 지원 구조로 인해 타 공공기관 등과의 중복지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복지원 업체 수는 2020년 159개에서 2023년 274개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전체 지원업체의 약 20%가 타 공공부문과 중복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업체와 타 공공부문 중복지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타 공공부문 중복지원업체 수(a)	159	244	274	274	239
전체 지원업체 수(b)	713	1,176	1,202	1,313	1,271
비중(a/b)	22.3	20.7	22.8	20.9	18.8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5년 기준으로 중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 117개, 한국가스공사 36개, 한국증권금융 3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 한국도로공사 14개, 국가철도공단 8개 등 다수 기관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중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전국 단위로 지원 대상을 설정한 예금보험공사와 지역 단위로 지원하는 타 공공기관 간 지원범위가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즉,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삼는 한국도로공사와 부산·경남지역이 대상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세종·충청권이 대상인 국가철도공단,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상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국 단위인 예금보험공사 간에 지원업체 선정 범위가 중첩되면서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보험공사와 중복지원 중인 타 공공기관 지원 대상 유형]

공공기관	주요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수 3인 이상 증가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창업기업 - 저출산 대책 우수업체, 사회적 경제기업, ESG 인증업체 - 공사 관련 업체(휴게소 입점업체, 계약 중소기업 등)
한국가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소재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 공사 추천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경남지역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공사 추천업체
국가철도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세종·충청권 소재 ESG 기업 - 공사 추천업체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업무 특성상 특정 지역 혹은 산업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상생협력의 대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협력업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단위 일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의 본래 목적과 괴리가 있는 운영방식으로 판단된다. 이는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일반 금융지원사업으로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지원유형 및 기관별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업체 중 공사 추천업체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동 사업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지원 대상이 공공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닌 전국 단위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본래의 취지인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협력 강화 기능이 약화되고, 범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으로 왜곡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전국 단위 및 비특화된 지원 대상 설정은 공공기관 간 중복지원을 초래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책효과의 식별 또한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이 광범위해질수록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선정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협약은행 중심으로 지원업체가 선정되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보다 여신심사 기준을 통과한 신용도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공사 추천업체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여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등 협력업체 기반이 제한적인 기관의 경우에는 사업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범용적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 기관별 분산 운영이 아닌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저하

(1)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 현황

동반성장협력대출은 협약기업인 공공기관이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동반성장협력대출에 따른 금리 지원을 받게 되어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정 기업이 다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중소기업들이 금리 지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정책의 형평성이 훼손된다. 여러 공공기관이 동일 기업에 대해 각각 금리 지원을 제공할 경우, 한정된 정책 자금이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공공기관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에 요청하여 받은 협약 공공기관별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중복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 중복지원 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행을 통해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기업 중 일부는 두 개 이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두 개 이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수가 총 634개였으며, 2022년에는 686개로 증가하였다. 이후 2023년에는 658개, 2024년에는 566개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기업이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공공기관 수는 두 개 공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세 개 이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22년에는 최대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은 기업도 확인되는 등 특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다수 기관을 통해 집중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지원 현황]

(단위: 개사)

연도	동일업체 중복선정 공공기관					
	2개 공공기관	3개 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5개 공공기관	6개 공공기관	합계
2021	546	77	9	2	0	634
2022	592	77	13	3	1	686
2023	582	68	6	2	0	658
2024	485	66	14	0	1	566

자료: 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공공기관 간 중복지원 분석_ 동일지역 내, 발전사 간 중복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① 동일지역 내 중복지원 사례_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 간 중복지원

한국가스공사는 기업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하는 2024년도 협약서에서 공사 추천업체를 제외한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은행이 선정하도록 위탁한다.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는 경북, 대구지역이라는 지역적 제약 하에 지원유형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에 업체 선정을 위탁하고, 2024년도 협약서에서 ESG 자가진단을 완료한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성장 관련 업종 중 친환경·녹색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 걸쳐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모두 기업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하여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은행이 지원업체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지원 대상 기준을 비교한 결과, 일부 기업이 두 기관의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함에 따라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지원 대상 기준]

연도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2020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중 은행이 선정	코로나19 확산 피해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2021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은행이 선정	코로나19 확산 피해기업, 일자리 창출 및 K-뉴딜 중소기업
2022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은행이 선정	코로나19 확산 피해기업, 일자리 창출 및 K-뉴딜 중소기업
2023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은행이 선정	은행 ESG 자가진단 완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9개 테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 관련 업종 영위

연도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 중 친환경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 녹색중소기업
2024	가스공사 추천기업, 대구경북지역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은행이 선정	은행 ESG 자가진단 완료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9개 테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친환경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 녹색중소기업

자료: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협약은행이 동일한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를 비교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를 기준으로 총 98개 업체가 예금보험공사 지원업체와 중복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지원유형 기준으로 공사 추천업체 1개사, 대구·경북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48개사, 대구·경북 일자리 창출기업 46개사, 대구·경북 코로나19 피해기업 3개사가 예금보험공사 지원업체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업들의 대출잔액은 총 180억 4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에서 ESG 및 혁신성장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며, 한국가스공사는 대구·경북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동일한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두 기관에 모두 동일 기업 추천하여 중복지원업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협약기관이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를 추천하기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협약은행에 의존한 결과이다.

[2024년 한국가스공사 기준 예금보험공사와 중복지원업체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공사 추천업체	대구경북			합계
		우수기술력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업체 수	1	48	46	3	98
대출잔액	500	10,176	6,664	700	18,040

자료: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② 발전사 간 중복지원 사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협력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5개 발전자회사는 2020~2024년 동안 매년 830~1,000억원을 협약은행에 예탁하고, 연간 385~440건, 1,495~1,7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금리인하 지원을 제공하였다.

한편, 5개 발전자회사의 협약액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확대되었던 2020~2022년 기간에는 910억~1,000억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 이후에는 일부 발전회사의 협약액 축소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잔액은 전반적으로 2021년 이후 약 1,300억~1,40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발전회사 별로 여신규모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협약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협약액을 축소하면서 대출건수가 감소한 반면, 한국남동발전은 대출 한도 확대에 따라 여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개 발전자회사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연도	한국 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 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중부발전	합계
협약액	2020	20,000	0	13,000	50,000	11,000	94,000
	2021	25,000	0	14,000	50,000	11,000	100,000
	2022	25,000	0	15,000	40,000	11,000	91,000
	2023	25,000	0	17,000	30,000	11,000	83,000
	2024	25,000	150	19,000	30,000	11,000	85,150
대출한도	2020	30,000	0	26,000	75,000	22,000	153,000
	2021	37,500	0	28,000	75,000	22,000	162,500
	2022	37,500	0	30,000	60,000	22,000	149,500
	2023	50,000	0	34,000	45,000	22,000	151,000
	2024	50,000	15,000	38,000	45,000	22,000	170,000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연도	한국 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 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중부발전	합계
여신잔액	2020	28,033	0	22,542	706	15,585	66,866
	2021	27,784	0	22,878	63,155	23,546	137,363
	2022	37,042	0	26,536	53,164	22,340	139,082
	2023	37,930	0	31,690	42,410	21,266	133,296
	2024	39,171	13,300	29,704	41,682	19,946	143,803
대출건수	2020	75	0	56	247	62	440
	2021	74	0	52	213	73	412
	2022	96	0	66	190	72	424
	2023	94	0	66	153	77	390
	2024	90	4	63	151	77	385

주: 한국남부발전의 경우는 협약액은 이자지원 해당액임

자료: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발전자회사들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업체가 여러 발전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리지원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 간 동일업체 중복지원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개 이상의 발전자회사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 비중은 2020년 9.2%에서 2024년에 1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자회사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남동발전은 2020년 지원업체 50개 중 8개(16.0%)가 타 발전자회사와 중복되었으며, 2024년에는 지원업체 64개 중 16개(25.0%)로 중복업체 수와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타 발전자회사와의 동일 업체 중복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서부발전은 협약액 감소로 지원업체 수가 줄어들었으나, 타 발전자회사와 중복되는 업체비중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타 기관과 중복지원하는 업체 수는 증가하여 2020년 5.0%에서 2024년 11.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2020년 14.5% → 2024년 15.6%로 확대되었으며, 한국동서발전은 2020년 13.3% → 2024년 16.4%로 증가하였다.

한국남부발전은 2024년에 동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으나, 지원업체 4개 중 2개가 타 발전자회사 지원업체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발전자회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업체 중 타 발전자회사 중복 현황]

(단위: 개)

기관명	중복업체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남동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8	10	11	12	16
	지원업체	50	46	57	61	64
	비중	16.0%	21.7%	19.3%	19.7%	25.0%
한국남부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0	0	0	0	2
	지원업체	0	0	0	0	4
	비중	-	-	-	-	50.0%
한국동서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6	8	7	7	9
	지원업체	45	46	52	56	55
	비중	13.3%	17.4%	13.5%	12.5%	16.4%
한국서부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10	11	11	12	15
	지원업체	202	174	162	131	126
	비중	5.0%	6.3%	6.8%	9.2%	11.9%
한국중부발전	타 기관 중복업체	9	9	10	11	12
	지원업체	62	73	72	78	77
	비중	14.5%	12.3%	13.9%	14.1%	15.6%
합계	타 기관 중복업체	33	38	39	42	52
	지원업체	359	339	343	326	322
	비중	9.2%	11.2%	11.4%	12.9%	16.1%

주: 업체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대출건수와는 차이가 발생함. 즉, 동일 업체가 대출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업체 기준으로는 1건으로 집계함

자료: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년 기준으로, 발전자회사 간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는 총 23개이며, 1개 업체는 4개 발전자회사(남동, 동서, 중부, 남부발전)로부터 동시에 금리인하 지원을 받았고, 4개 업체는 3개 이상의 발전자회사로부터 중복적으로 금리인하 지원을 받았다.

[2024년 5개 발전자회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업체 중 타 발전자회사 중복업체 현황]

(단위: 개)

순번	업체명	한국 남동발전	한국 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중부발전	한국 남부발전
1	AA터빈	○	○	○		
2	BB공조기술개발(주)	○		○		
3	(주CC엔지니어링	○		○		
4	DD중공업(주)	○			○	
5	(주)EE스	○			○	
6	(주)FF티	○	○	○		
7	GG롤랜트(주)	○			○	○
8	(주)HH인더스트리	○		○	○	
9	(주)II전기	○		○		
10	(주)JJ지	○	○		○	
11	KK트	○	○			
12	LL기술개발(주)	○		○		
13	주식회사 MMM텍	○	○			
14	(주)NN.R.B		○	○		
15	(주)OO이엔지			○	○	
16	(주)PP맥스			○	○	
17	QQ기계			○	○	
18	(주)RR텍		○		○	
19	SS테크			○	○	
20	(주)TT텍			○	○	
21	UU팩	○	○		○	○
22	XX펌프	○		○		
23	(주)ZZ볼트산업	○		○		
합계		16	9	15	12	2

자료: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이 협약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UU팩의 경우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15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1.55~2% 금리인하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해당 기업의 기업은행 대출잔액의 약 50% 수준에 해당하였다. 또한 VV터빈의 경우 동일 3개 발전회사로부터 9.41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금리인하 지원을 받아 기업은행 대출의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개 이상 발전자회사의 동일업체 지원액 및 기업은행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업체명	한국 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 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중부발전	합계 (a)	기업은행 대출(b)	비중 (a/b)
UU팩	500	500	-	500	500	2,000	3,000	66.7
VV터빈	90	-	400	-	451	941	1,583	59.5

자료: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소결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다수의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금융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간 중복지원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요건을 만족하는 다수의 기업에게 배분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운영상의 문제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복지원은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통합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 기관이 협약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특히 동일 협약은행이 다수 공공기관의 지원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기업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관리장치는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은 지원 대상 관리보다는 지원 규모 및 건수 등 양적 실적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동일 기업에 대한 반복적·장기적 지원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신규 및 미지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지원업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기관 간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통제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원업체 선정 시 신규·미지원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기준을 명확히 도입하고, 중복지원 발생 시 조정·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 협약서상 동일기업 대출기간(연장), 대출한도 미명시로 일부 기업 장기간 집중 지원 문제

(1) 협약서상 대출기간(연장) 미명시로 인한 일부 기업 장기간 지원 문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은행과 맺은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명시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기간, 즉 금리지원을 제공하는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출기간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금리지원이 제공되는 기간이 불명확해지며, 이로 인하여 일부 기업만 장기간 동일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금리지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37개 공공기관의 협약은행별 협약서를 전수조사하여 대출기간 명시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0개 협약에서 금리지원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 42개 협약의 47.6%에 해당한다.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상 대출기간 미명시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명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IM뱅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하나은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하나, 우리은행),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기업, 하나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기업은행), 한전KPS, 에스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전KDN(기업은행),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기업은행),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기업, 수협, 하나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동발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에 대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지원업체 지원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13개 업체 중 3년 이상 지원을 받은 업체가 510개(3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지원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등 동일 기업을 장기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반면 1년 미만 신규 지원업체 비중은 6.6%에 불과하여 신규 기업 유입이 제한되고 정책자금의 순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현재 3년 이상 지원업체 수가 전체 지원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의 협약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기업은행)(66.7%), 인천항만공사(71.4%), 국가철도공단(기업은행)(67.4%), 인천국제공항공사(하나은행)(63.6%), 한전KDN(기업은행)(55.9%), 한국동서발전(기업은행)(53.2%), 여수광양항만공사(수협, 기업은행)(51.7%) 등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협약일인 2025년 10월 24일 이후 신규로 지원한 업체는 2개에 불과하며, 2개 업체는 2018, 2019년부터 지원받기 시작하여 2025년 계약분의 협약종료일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7년 이상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지원업체 27개에 대한 평균 지원 연수는 3.7년으로 분석되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21개 중 71.4%가 3년 이상 지원을 받고, 5년 이상 지원을 받은 업체도 다수 포함되어 일부 기업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1년 미만 신규 지원업체는 2개에 불과하여 신규기업 유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지원기업 지원 기간이 6년 이상인 곳이 13개, 5~6년인 곳이 16개, 4~5년이 38개, 3~4년인 곳이 24개 등 3년 이상 지원 중인 기업 수가 전체 135개 기업의 67.4%인 91개로 장기지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전체 지원업체 11개의 63.6%에 해당하는 업체가 3년 이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기간이 6년 이상인 곳도 1개, 5~6년인 곳이 4개, 4~5년 1개 등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의 동일기업 대출한도가 10억원으로, 타 공공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1~5억원 수준의 대출 대비 금리 혜택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전체 대출한도가 100억원으로 10개 정도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관에 장기간 지원이 편중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참고로, 동일하게 협약서상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동일기업 대출한도가 최대 1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지원업체는 전체 지원업체의 35.3%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해 양호하다.

한전KDN도 최근 협약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102개 지원업체 중 3년 이상 지

원하는 업체 수가 57개로 55.9%를 차지하는 등 장기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최종 협약이 갱신된 2025년 9월 18일 협약서에 근거하여 신규로 선정된 지원업체는 5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2024년 이전에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금리혜택을 받은 업체 수는 57개로 전체 지원업체 62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면서, 기간 연장은 은행 여신 관련 제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대출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으로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기간이 6~8년인 곳이 7개이며, 3년 이상 지원한 업체도 45개로 전체 87개의 51.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6년 5월 중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 개정을 통하여 대출기간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가장 최근 협약일인 2025년 6월 5일 이후 신규로 지원한 업체는 전체 139개 중 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2년 이상 지원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도 2025년 10월 26일 협약서에 근거하여 새롭게 선정된 지원업체는 없으며, 6개 업체 모두 지원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이 중 2개 업체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에 대한 금리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상 대출기간 미명시 공공기관의 지원업체 지원 기간 현황]

(단위: 개, %)

공공기관명		6년 초과	5~6년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합계	3년 이상 비중
국가철도공단		13	16	38	24	22	18	4	135	67.4
인천국제공항공사		1	4	1	1	1	3	0	11	63.6
한국가스공사(기M뱅크)		27	29	21	43	53	70	12	255	47.1
한국농어촌공사		0	0	0	19	75	43	2	139	13.7
한국동서발전		0	5	0	28	17	7	5	62	53.2
한국전기안전공사		0	0	0	3	11	14	0	28	10.7
한국전력기술		0	0	0	0	1	9	3	13	0.0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우리은행)		0	1	0	1	0	51	1	54	3.7
한국중부발전		0	3	1	19	24	20	2	69	33.3
한국철도공사(기업은행)		6	1	3	12	39	73	1	135	16.3
한전KPS		0	0	0	0	0	25	1	26	0.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4	5	7	4	2	2	27	66.7
한전KDN(기업은행)		3	5	31	18	7	38	0	102	55.9
부산항만공사		1	0	12	15	6	11	29	74	37.8
여수광양항만공사		7	18	12	8	16	18	8	87	51.7
인천항만공사		1	5	3	6	2	2	2	21	71.4
한국조폐공사		0	2	0	0	4	0	0	6	33.3
한국남동발전		0	0	4	21	15	14	15	69	36.2
합계	업체 수	61	93	131	225	297	418	87	1,313	38.8
	비중	4.6	7.1	10.0	17.1	22.6	31.8	6.6	100.0	38.8

주: 1. 2025년 말 기준임

2.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 한국철도공사(하나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기업은행), 에스알,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는 2025년 이전에 종료됨에 따라 제외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위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원업체에 중장기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공기관이 협약은행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기간 명시 규정이 미흡한 채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협약서상 대출기간이 미명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동 사업의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공공기관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양적 지표 중심의 사업실적에만 관심을 둔 결과로, 실제로 협약은행 주도로 대출업체가 선정되고, 장기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경우 동일 기업에 대한 장기간 지원이 이루어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일부 기업이 금리지원 혜택을 장기간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될 우려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다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자금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신규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일 기업에 대한 장기·반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협약서상 대출기간, 동일기업 대출한도 미명시에 따른 일부 기업 장기지원 주요 사례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기간, 대출한도 미명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말 기준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하여, 한국남부발전과 기술보증기금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공사는 2022년부터 하나은행 및 한국남부발전과 'ESG 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약 1,500억원 규모의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협력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0.2%p의 금리 인하를 지원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는 우리은행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여 약 500억원 규모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일부 기업에 대해 최대 1.0% 범위 내 금리 지원을 실시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반성장대출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하나 은행	예탁금	해당없음		151,220	0	0
	대출잔액			14,165	20,654	3,805
우리 은행	예탁금			해당없음	49,193	0
	대출잔액				600	6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협약서에 동일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및 지원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협약은행 주도로 선정된 일부 업체에 대해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지고 금리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제로 대부분 공공기관이 동일기업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하나은행이 동일기업에 대해 최대 67.9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이물산의 경우 2022년 기준 하나은행 차입금 21억원 전액에 대해 금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주)WW엔지니어링은 2024년 말 기준 17억원에 대해 금리 혜택을 받았다. 특히 △△컨테이너터미널(주)의 경우 2023년 이후 대출잔액이 67.9억원에 이르며,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한 금리 지원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협약은행인 하나은행 선정 지원 대상업체 여신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약정금액	대출잔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1	(주)aa로보테크	2,000	1,985	1,985	-	-	-
2	(주)bb왕	500	500	500	500	500	-
3	cc요턴(주)	2,000	2,000	2,000	-	-	-
4	(주)dd르네상스	450	450	450	450	450	-
5	(주)WW엔지니어링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6	ee(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주)fff민	500	420	420	420	420	-
8	gg중기(주)	145	145	145	145	145	145
9	(주)hh반도체	350	350	350	350	350	350
10	(주)ii물산	2,100	2,100	2,100	1,890	1,890	-
11	(주)jj원	500	500	500	500	500	500
12	주식회사 kk솔루션	-	-	160	110	110	110
13	(주)ll테크케이알	1,000	1,000	1,000	-	-	-
14	mm파워주식회사	2,000	2,000	2,000	-	-	-
15	(주)nn스타	-	-	2,370	2,370	2,370	-
16	(주)oooo로지스틱스	-	-	4,500	4,420	4,420	-
17	△△컨테이너터미널(주)	-	-	6,799	6,799	6,799	-
합 계		14,245	14,150	27,979	20,654	20,654	3,805

주: 대출잔액은 각 연도 말 기준임. 즉, 연중 협약지원 종료 시 연말 대출잔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협약서에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동 사업을 운영한 결과, 금리지원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022년부터 총 이자지원액 63,802천원 중 상위 6개 업체에 대한 지원액이 46,908천원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컨테이너터미널(주) 1개 업체에 대한 지원액이 12,652천원으로 전체의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기업에 대한 관리·모니터링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협약은행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방치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컨테이너터미널(주)은 부산항만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서도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협약서에 동일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및 지원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업체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을 방지하고 정책자금이 보다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하나은행 선정 지원 대상업체 이자지원 현황]

(단위: 원, %)

구분	지원업체	신규일	대출약정금액 (백만원)	이자지원 합계	이자지원 비중
1	(주)aa로보테크	2022-09-23	2,000	2,639,808	4.1
2	(주)bb왕	2022-09-30	500	1,656,434	2.6
3	cc요턴	2022-09-29	2,000	2,101,370	3.3
4	(주)dd르네상스	2022-09-30	450	1,751,446	2.7
5	(주)VV엔지니어링	2022-10-07	1,700	7,601,096	11.9
6	ee(주)	2022-10-11	1,000	4,449,315	7.0
7	(주)fff민	2022-10-25	500	1,633,493	2.6
8	gg중기(주)	2022-10-25	145	634,027	1.0
9	(주)hh반도체	2022-10-24	350	1,532,329	2.4
10	(주)ii물산	2022-11-03	2,100	7,731,471	12.1
11	(주)jj원	2022-11-18	500	2,120,548	3.3
12	주식회사 kk솔루션	2023-01-06	160	532,603	0.8
13	(주)ll테크케이알	2022-12-24	1,000	1,755,068	2.8
14	mm파워주식회사	2022-12-20	2,000	536,986	0.8
15	(주)nn스타	2023-03-27	2,370	7,754,525	12.2
16	(주)oooo로지스틱스	2023-04-03	4,500	6,719,594	10.5
17	△△컨테이너터미널(주)	2023-04-10	6,799	12,652,226	19.8
합 계			28,074	63,802,339	100.0

주: 지원업체에 대한 우대금리는 0.2p이며, 이자지원 합계는 신규 발생일부터 2024년 12월 말 협력 대출 종료 시까지의 대출 약정금액에 우대 금리 0.2%p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리 인하액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② 국가철도공단 : 대출기간 미명시

국가철도공단은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공단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 사업자 등록증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대전·세종·충청권에 소재한 ESG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예탁금 150억원, 대출한도액 300억원 규모로 123개 업체에 24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약서에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주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한도
① 지원 대상 기업은 '공단'이 '은행'에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대전·세종·충청권에 소재한 ESG 경영기업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 당 지원한도는 추천협력기업 5억원, ESG 경영기업은 2억원으로 하되, 지원 대상 및 한도는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자료: 국가철도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런데, 2025년도 지원업체 중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 중 2023년 이전에 지원이 시작된 업체가 93개(68.9%)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대출공급액은 22,373백만원으로 전체 대출공급액 32,563백만원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협약서상 지원(대출)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1년 이하 신규지원은 극소수임에 반해 5년 이상 장기·반복적 지원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지원기업 중심으로 자원이 반복 배분되면서 신규 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며, 동일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으로 인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원종료 기준 및 평가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협약서에 지원 기간을 명문화하고, 일정 기간 도달 시 지원종료를 의무화하여 장기 지원기업에 대한 단계적 졸업을 유도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지원 기간 현황]

(단위: 개, %)

6년 이상	5~6년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합계	3년 이상
6	32	0	55	31	19	2	135	68.9

주: 2025년 말 기준임

자료: 국가철도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③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대출기간 미명시로 대부분 중장기 집중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일부 업체들에 대한 중장기 금융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기간이 협약서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정책의 공정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공단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예탁금 23억원, 대출한도액 46억원 규모로 23개 업체에 48.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지원 기업의 66.7%가 3년 이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70% 이상이 3년 이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지원기업 수가 27개에 불과하고 특정 기업군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약서에 지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장기지원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상 반복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기업 진입을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업과 지원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정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지원 기간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6년 이상	5~6년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합계	3년 이상
업체 수	2	4	5	7	4	2	2	27	18
금액	370	430	1060	1,300	880	400	400	4,840	66.7

주: 2025년 말 기준임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④ 인천항만공사 : 대출기간 미명시 및 대출미공급 문제

인천항만공사는 수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인천항 협력기업(배후단지 입주기업) 또는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하여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예탁금 50억원, 대출한도액 80억원 규모로 21개 지원 건수에 62.8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약서에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71.4%이며, 금액분포도 65.9%로 장기 구간에 자금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간 지원 비중이 6개, 4~5년이 4개, 3~4년이 5개, 6년 이상도 1개 등 장기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신규 및 단기 지원 비중이 낮아 신규 진입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듯 신규 진입이 어려운 장기간 지원업체 중심으로 동 사업을 운영할 경우, 지원받는 업체와 받지 못하는 업체 간 격차가 발생하게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는 지원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일정 기간 후 의무종료하는 졸업제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배후단지 입주기업 중심에서 관련 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이 금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지원 기간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6년 이상	5~6년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합계	3년 이상 비중
업체 수	1	6	4	5	1	2	2	21	71.4
금액	190	1,500	1,482	970	480	1,000	660	6,282	65.9

주: 2025년 말 기준임

자료: 인천항만공사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소결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에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지원 종료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동일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신규 기업의 참여는 제한되고, 정책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장기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기관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대출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협약은행 주도로 일부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금리 혜택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협약 체결 단계에서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 등 핵심 관리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과 통제가 미흡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협약서상 주요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거나, 협약은행 중심이 실질적으로 동 대출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협약기관인 공공기관이 정책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 미설정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적 지원 수단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협약 체결 시 대출기간과 동일기업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원업체 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종료 또는 졸업제 도입 등을 통해 정책자금이 보다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라. 협약서 위반(동일기업 대출 기간 초과)으로 일부 기업 장기지원 문제

(1) 협약서상 동일기업 대출 기간의 중요성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 협약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공공기관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금리지원을 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만큼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서에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기업에 대한 대출 기간은 금리지원이 제공되는 범위를 한정하여 일부 기업에 대한 장기·반복지원을 방지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에 지원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대출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핵심적인 관리 장치이며, 동반성장협력대출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약서에서 정한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일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특정 기업에 장기·집중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리지원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는 신규 협력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정책 수혜 대상의 다양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협약서에 규정된 대출 기간을 준수하여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동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협약서상 대출기간 초과 기업 장기지원 사례

본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상 동일기업에 대한 대출 기간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협약서상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일부 기업에 대한 장기·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협약 기준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미흡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금리혜택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면서 정책지원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신규 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협약은행이 기존 거래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하는 운영 관행이 형성됨에 따라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본래 목적과 달리 일부 기업에 대한 반복적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협약 기준 준수 및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서상 규정하고 있는 대출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 업체에 금리를 지원한 공공기관별 주요 현황이다.

①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하여 두 종류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선도기업, 공단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기업은행 1 프로그램의 예탁금은 375억원, 대출한도는 500억원이며, 총 75개업체에 대하여 443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약서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업체는 2025년 말 기준으로 55개로 전체 75개의 7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평균 지원 기간은 4.1년에 이르러 일부 기업이 장기간 금리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현황]

(단위: 개소)

협약은행	대출 기간	연장 여부	연도별 대출업체 지원 현황					
			구분	3년 초과	2~3년	1~2년	~1년	합계
기업은행 1	3	없음	업체 수	55	7	6	7	75
			비중	73.3%	9.3%	8.0%	9.3%	100.0%

주: 기업은행 2는 2025년에 협약종료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②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태안 지역 기업 및 협력기업,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회사 동반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으로 예탁금 300억원, 대출한도 450억원 규모로 136개 업체에 37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기업별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2022년 4월 17일 기준으로 지원한 기존 지원기업에 한하여 3년 이내 재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신규 지원업체는 최대 8년이 되는 202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2017년에 지원받은 업체는 최장 202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분석에서 한국서부발전의 지원업체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대출기간을 초과한 지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2026년에 만기 도래 기준 지원업체 중 2017년부터 지원된 업체가 35개(25.7%)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대출공급액은 12,538백만원으로 전체의 29.0%에 해당한다. 이는 협약서상 허용된 최대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일부 기업에 대한 장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서부발전 2025년 기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17년까지 지원시작 업체	2018년 이후 지원시작업체	합계
업체 수	개수	35	101	136
	비중	25.7%	74.3%	100.0%
지원 금액	금액	12,538	30,681	43,219
	비중	29.0%	71.0%	100.0%

주: 2025년도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업체 수 및 지원금액이며, 지원금액은 공급액(약정액) 기준임

자료: 한국서부발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③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물산업 협력 중소기업, 물산업 협력 중소기업 중 ESG 경영 추진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예탁금 160억원, 대출한도액 400억원 규모로 104개 업체에 3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지원 기간]

주요 내용
지원 “중소기업”의 대출기간은 1년이며, 이 협약이 연장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시 동일기업당 최대 3년을 한도로 1년 단위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런데, 2025년 지원업체 중 대출 기간(최장 3년)을 초과하여 지원한 업체가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 중 2023년 이전에 지원이 시작되어 최장 대출기간인 3년을 초과한 업체가 26개(25.0%)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대출공급액은 8,485백만원으로 전체 대출공급액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2025년 기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22년 협약일 이전까지 지원시작 업체	2023년 협약일 이후 지원시작업체	합계
업체 수	개수	26	78	104
	비중	25.0%	75.0%	100.0%
지원 금액	금액	8,485	30,280	38,765
	비중	21.9%	78.1%	100.0%

주: 지원금액은 공급액(약정액) 기준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④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 광고업 영위기업, 지역사회기업, ESG경영 추진기업, 재단 지원 미디어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93개 업체에 24.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개소)

협약 및 대출한도	지원업체 수	지원금액	지원 기간
2,500	93	2,443	1년(최장 5년)

주: 지원업체와 지원금액은 2025년 기준임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본 분석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업체에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대출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5년도 지원업체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2026년 협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지원업체 중 2021년 이전부터 지원된 업체가 8개(8.6%)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출공급액은 전체의 21.2%에 해당한다. 지원업체에 직접적인 금융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는데 효과적인 동 프로그램이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일부 업체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금리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년 기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21년 협약일 이전 지원시작 업체	전체
업체 수	개수	8	93
	비중	8.6%	100.0%
지원금액	금액	757	3,443
	비중	21.2%	100.0%

주: 지원금액은 공급액(약정액) 기준임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하여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공사 추천업체, 대구·경북 소재 우수기술력 보유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다. 2025년 기준 예탁금 800억원, 대출한도 1,600억원 규모로 596개 업체에 1,594.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서상 기업별 지원한도는 4억원, 지원 기간은 4년이다. 다만, 2024년 4월 27일 이전에 신규지원업체는 최장 5년, 5억원이다. 그런데, 최장 지원 기간 5년을 초과하여 지원받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2025년 기준 30개 업체(5%)가 2026년 협약 만기일까지 지원 기간 5년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출공 급액은 8,013백만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6년 동안 금리 지원을 하여 동일 기업이 장기간 금리지원을 독점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현황]

(단위: 개소)

협약은행	대출 기간	연장 여부	연도별 대출업체 지원 현황					
			5년 초과	3~5년	2~3년	1~2년	~1년	합계
기업은행	1	5	30	189	149	115	113	596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소결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과정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일부 기업에 대한 장기·집중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협약에 기반 하여 운영되어야 할 정책사업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특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협약서상 지원 기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 기업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협약 규정에 대한 사전 이해 부족,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이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기간, 한도 준수 등을 통한 동반성장협력대출 제도의 취지를 이행하기보다는 지원 규모 및 실적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기업에 대한 반복적·장기적 지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신규 및 미지원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

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협약서에 규정된 대출기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종료 또는 졸업제 도입을 통해 반복 지원 구조를 해소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 대출한도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 문제

(1) 동반성장협력대출 대출한도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 문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정책금융제도이다.

공공기관이 협약은행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거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대출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용도 및 담보 여건 등의 한계로 인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이러한 금융 접근성 제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과 협력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이 협력 중소기업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2021~2026년 동안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예탁금과 대출한도액 및 대출공급액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 기관 중 대출미공급액이 대출한도의 20% 이상인 기관은 총 11개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대출한도 대비 대출공급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전반적으로 대출한도의 상당 부분이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급 비율은 2021년 48.0%에서

2022년 55.2%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37.3%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4년 68.4%, 2025년 70.2%에 이르는 등 최근에는 대출한도의 약 70%가 미집행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24년 이후 일부 프로그램을 종료함에 따라 대출한도 대비 미공급액 비중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대출한도 대비 실제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하여 협약은행에 예치한 협약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다음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1~2025년 중 2023년을 제외한 4년 동안 대출공급액이 예탁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협약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지향하는 금리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출실행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치금 이자정산이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창출하지 못한 채 유희자금화되어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

[지원업체 대출미공급액이 20% 이상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탁금	100,500	102,500	97,500	48,500	39,500
대출한도(a)	176,500	180,500	171,500	71,500	56,500
대출공급액	91,803	80,823	107,580	22,595	16,840
미공급금액(b)	84,697	99,677	63,920	48,905	39,660
미공급대출 비중(b/a)	48.0%	55.2%	37.3%	68.4%	70.2%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의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출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및 수요 등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대출한도 설정, 지원조건 및 절차의 까다로움 등 제도 설계 및 운영 상의 미흡 등이 주요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출한도 설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약은행과의 협약 구조를 점검하여 예치금 규모가 과도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미실행 재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예탁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2025년 말 현재 대출공급실적이 대출한도의 80%보다 적은 6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운영 현황이다.

① 공영홈쇼핑의 경우 2023년 이후 예탁금 200억원, 대출한도 300억원 규모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금액은 2023년 26.6억원, 2024년 16.6억원, 2025년 13.7억원에 그쳐, 대출한도 대비 미실행대출 비중이 각각 91.1%, 94.5%, 9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한도에 비해 실제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실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영홈쇼핑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공영홈쇼핑이 직접 추천하거나 협약은행이 추천한 기업이 협약은행 심사 단계에서 신용등급 등의 사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원 대상 기업의 신청 자체가 저조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추천업체의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협약은행에 보다 유연한 심사 기준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으로 인해 이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출한도 대비 대출공급 실적이 낮아 상당 규모의 미공급 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급 비율은 2021년 53.1%, 2022년 63.3%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33.0%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5년에는 48.2%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출한도를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급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단순한 한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약서에는 대출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업체에 대한 장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기준 지원 건수 11건 중 지원 기간이 6년 이상인 업체가 2개, 4~6년인 업체가 5개로 나타난 반면, 같은 해 협약을 갱신하면서 신규로 지원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 업체 중심으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동일 기업에 대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지원업체 수는 2025년 기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정된 재원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다수의 협력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려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은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출기간 설정, 지원 대상의 확대, 한도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③ 한국철도공사(기업은행 2)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대출공급액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공급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2025년까지 미공급 비율이 지속적으로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출한도의 상당 부분이 실제 대출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한도 대비 공급 실적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 협력대출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협력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제도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대출공급 실적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말 협약을 변경하여 2026년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ESG 경영 관련 기업에서 AI 및 K-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이 실제 대출 공급 확대와 정책효과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인천항만공사(수협은행)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하나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고, 총 50억원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80억원

의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21개 업체에 대하여 61.42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금리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대출 미공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협은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에는 대출한도 전액이 공급되는 등 높은 활용도를 보였으나,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미공급 비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한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공급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동반성장협력대출 재원으로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실제 중소기업 대출 지원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수협은행과의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시하지 않아, 2025년 말 기준 지원 중인 4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2020년부터 약 6년간, 1개 업체는 약 4년간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일부 업체에 대한 장기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업체 발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을 지원하고자 동일 주무부처 산하 유관기관인 수협은행과 협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사업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26년에는 예탁금 규모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사업 운영 부진이 수년 동안 지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적 대응으로, 보다 선제적인 사업 관리 및 운영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⑤ 여수광양항만공사(수협은행)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초기에는 대출 한도 전액이 공급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대출공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미공급 비율이 71.3%에 이르는 등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대출한도를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미공급 비율이 32.0%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대출공급 확대에 따른 개선이 아니라 한도 축소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지원 중인 업체는 모두 2021년 이전부터 지원된 업체로 확인됨에 따라 신규 업체 발굴 및 대출미공급분 해소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협약은행인 수협은행의 사업수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말 협약 갱신 시 예탁금을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하였으나, 신규 업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구체적인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여전히 2021년 이전부터 지원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등 제도 운영의 개선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업체 대출미공급액이 20% 이상 공공기관별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영홈쇼핑 (주)	예탁금	미협약		20,000	20,000	20,000
	대출한도(a)			30,000	30,000	30,000
	대출공급액			2,660	1,660	1,370
	미공급금액(b)			27,340	28,340	28,630
	미공급대출 비중(b/a)			91.1	94.5	95.4
인천국제 공항공사 (하나은행)	예탁금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대출한도(a)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대출공급액	9,380	7,340	6,700	5,280	5,178
	미공급금액(b)	10,620	12,660	3,300	4,720	4,822
	미공급대출 비중(b/a)	53.1	63.3	33.0	47.2	48.2
한국철도공사 (기업은행 2)	예탁금	미협약		2,000	2,000	2,000
	대출한도(a)			5,000	5,000	5,000
	대출공급액			2,677	2,738	2,986
	미공급금액(b)			2,323	2,262	2,014
	미공급대출 비중(b/a)			46.5	45.2	40.3
인천항만공사 (수협은행)	예탁금	2,000	2,000	2,000	2,000	2,000
	대출한도(a)	2,000	2,000	2,000	2,000	2,000
	대출공급액	2,000	2,000	1,810	900	950
	미공급금액(b)	0	0	190	1,100	1,050
	미공급대출 비중(b/a)	0.0	0.0	9.5	55.0	52.5
여수광양 항만공사 (수협은행)	예탁금	1,500	1,500	1,500	1,500	500
	대출한도(a)	1,500	1,500	1,500	1,500	500
	대출공급액	1,500	900	630	430	340
	미공급금액(b)	0	600	870	1,070	160
	미공급대출 비중(b/a)	0.0	40.0	58.0	71.3	32.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 부진에 따른 예탁금 유휴화 문제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은 공공기관이 협약은행에 예탁금을 예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할 경우 예탁금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휴자금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대출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사업의 활용도가 저하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2025년 말 기준 협약이 종료되었으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운용하던 기간 동안 대출미공급액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대출실적이 저조했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협약 종료 이전부터 대출한도 대비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미공급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대출 기능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공항공사(하나은행)는 5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52.1%로 나타나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협약은행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가 낮아 대출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미공급 비율이 2년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역시 대출공급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공급 비율이 2021년 34.0%에서 2022년 41.8%로 증가하는 등 대출한도의 상당 부분이 실제 대출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협약은행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종료한 공공기관들은 주로 재무건전성 악화, 주된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확보, 또는 대기자금 활용 종료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4년 주된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협약을 종료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본사 매각자금 중 부산 사옥 및 촬영소 건립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기자금 중 50억원을 한시적(2018~2022년)으로 활용한 후 종료하였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해 2025년부터 협약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재무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정 규모의 예탁금을 협약 은행에 예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하여 예탁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자금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재무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출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유지된 결과 동 사업이 협력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운영은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비해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인 구조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효율성과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동시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출공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정이나 개선 없이 사업이 유지되다가 종료된 점은 사전적·지속적 관리체계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재무 여건과 대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탁금 규모의 적정성을 설정하고,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탁금 축소, 협약 조건 조정, 사업 구조 개편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동 사업용 예탁금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원업체 대출미공급액이 20% 이상 공공기관 중 협약종료된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수력 원자력 (신한은행)	예탁금	10,000	10,000	10,000	협약 종료	
	대출한도(a)	20,000	20,000	20,000		
	대출공금액	12,171	12,071	13,721		
	미공급금액(b)	7,829	7,929	6,279		
	미공급대출 비중(b/a)	39.1	39.6	31.4		
한국수력 원자력 (기업은행 II)	예탁금	40,000	40,000	40,000		
	대출한도(a)	80,000	80,000	80,000		
	대출공금액	52,660	44,288	68,252		
	미공급금액(b)	27,340	35,712	11,748		
	미공급대출 비중(b/a)	34.2	44.6	14.7		
영화진흥 위원회	예탁금	5,000	5,000	협약 종료		
	대출한도(a)	10,000	10,000			
	대출공금액	6,599	5,819			
	미공급금액(b)	3,401	4,181			
	미공급대출 비중(b/a)	34.0	41.8			
한국공항공사 (하나은행)	예탁금	1,000	1,000	1,000	1,000	협약 종료
	대출한도(a)	1,000	1,000	1,000	1,000	
	대출공금액	141	471	844	483	
	미공급금액(b)	859	529	156	517	
	미공급대출 비중(b/a)	85.9	52.9	15.6	51.7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농협)	예탁금	미협약		8,000	8,000	협약 종료
	대출한도(a)			16,000	14,000	
	대출공금액			6,410	6,710	
	미공급금액(b)			9,590	7,290	
	미공급대출 비중(b/a)			59.9	52.1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소결

동반성장협력대출은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금융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공공기관에서 대출한도 대비 실제 대출공급 실적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대출한도의 절반 이상이 미공급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일부는 80% 이상이 미집행되는 등 제도의 핵심 기능인 대출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출공급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당 규모의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정책자금이 실제 중소기업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장기간 예치된 채 유희자금으로 남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공공기관 재정 운용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운영으로,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저해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대출 수요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수요 대비 과도한 대출한도 설정, 지원조건 및 절차의 제약 등 제도 설계와 운영 전반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 규모 조정이나 협약 조건 개선 등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사업 관리체계의 미비를 보여준다. 일부 기관에서는 재무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하다가 사후적으로 협약을 종료하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제도 취지와 달리 상당한 규모의 정책자금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희화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금융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대출 수요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예탁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탁금 축소, 협약 구조 개선, 지원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미집행 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책자금이 실제 중소기업 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제도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바. 대출미공급분 이자 정산 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자 축소 문제

(1) 공공기관, 협약은행별 대출미공급분 예치금 이자정산방법 비교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 협약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지정한 지원 대상기업(이하 지원업체)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지원업체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을 협약은행에 예치하고, 협약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지원업체에 대출을 실행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과 협약은행 간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동 프로그램은 협약 종료 시점에 예치 재원에 대한 정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정산 대상은 협약 방식에 따라 '이자지원금' 방식과 '예탁금'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예탁금 방식은 공공기관이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지원업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협약 종료 시 실제 이자지원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미사용 이자액이 정산 대상이 된다.

반면, 이자지원금 방식은 공공기관이 지원업체의 대출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이자지원액을 사전에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협약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협약 종료 시 실제 이자지원액이 예치된 이자지원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이 정산 대상이 된다.

이자지원금 방식은 필요한 금액만을 사전에 산정하여 예치하는 구조이므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하는 방식에 비해 재원 활용의 효율성이 높고 공공기관의 자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협약은행·공공기관별 동반성장협력대출 이자정산방법]

재원	정산대상	적용 공공기관	정산방법
예탁금	예탁금 이자	한국관광공사, 한국 남부발전(주)을 제 외한 공공기관	협약 종료 시, 은행은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미공 급액(대출한도-대출공급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 여 이를 회사에 반환함
이자 지원금	이자 지원금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협약 종료 시, 은행은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 미공 급으로 인한 잔여이자 지원금이 발생할 경우, 이 를 회사에 반환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정산 대상이 예탁금 이자인 경우, 이자 정산 방식은 협약은행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협약은행에서 정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대출 미공급액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해당 금액의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미공급액(대출한도액 - 대출공급액)을 산정할 때, 대출공급액을 단순 누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신규 대출실행 시점이나 중도상환 발생 시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협약기간 중간에 발생한 신규 대출이나 중도상환분이 실제 대출 실행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산 대상이 되는 대출 미공급액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및 부산은행은 대출 미공급액을 산정할 때 신규 대출 및 중도상환에 따른 기간을 반영한 평균잔액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즉, 대출의 실제 실행 기간을 고려하여 예탁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과 지원업체에 대한 이자지원액을 보다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협약기간 동안의 자금 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이자정산방식으로 볼 수 있다.

[협약은행·공공기관별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이자정산 방식 비교]

구분	적용은행	이자정산 대상	① 대출 미공급액 산정방식	③ 대출공급액 산정 방식			
				신규대출	중도상환	만기연장	특징
단순 누적 방식	기업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	① 대출 미공급액 중 예탁금 해당액	② 대출한도 - ③ 대출공급액	전액 반영	전액 반영	전액 반영	시점 고려 없음
평균 잔액 방식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출한도 - 평균잔액 기준 대출공급액	실행일 ~ 종료일 평균잔액	실행일 ~ 상환일 평균잔액	실행일 ~ 만기일 평균잔액	실제 운용 기간 반영

주: 경남은행을 협약은행으로 두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은 2025년 11월에 최초로 협약을 실시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수의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의 이자정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규 대출 실행일과 중도상환 발생일을 반영하지 않는 단순누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대출한도액에서 차감되는 대출공급액이 실제로 다 과다하게 산정되고, 그 결과 이자정산 대상이 되는 대출 미공급액 및 이자정산액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협약은행·공공기관별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이자정산대상]

방식	협약은행	공공기관
단순 누적 방식	기업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기업은행),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기업은행, iM뱅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주)(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기업은행),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스알, 한전KDN(주), 공영홈쇼핑,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기업은행, 수협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조폐공사
평균 잔액 방식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하나은행), 한국도로공사(하나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신한은행),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철도공사(하나은행), 인천항만공사(하나은행)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공기관은 2개 이상의 은행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자 정산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대출 미공급분 산정과 관련하여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의 이자정산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공항공사는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과 각각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대출 미공급분에 대한 이자 정산 방식이 협약은행별로 상이하다. 기업은행과의 협약에서는 대출한도액에서 단순 대출공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하나은행과의 협약에서는 대출평균잔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출 미공급분을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약은행별 정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정산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개 이상 협약은행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체결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	단순누적 방식(기업은행 방식)	평균잔액 방식(하나은행 방식)
한국공항공사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도로공사	기업은행, iM뱅크	하나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철도공사	기업은행	하나은행
인천항만공사	기업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협약은행 예치금 이자수익 과소정산 문제_대출공급액 방식과 대출평균잔액 방식 비교 사례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대출 미공급분에 대한 이자 정산 방식이 서로 다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협약은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이자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다음의 표와 같이 두 개의 은행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기업은행과의 협약은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하나은행과의 협약은 2024년 이후 종료되었다.

한국공항공사는 협약에 따라 대출 미공급액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산받고 있으나, 이자 정산대상 금액의 산정방식은 협약은행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대출 미공급액을 산정할 때 대출한도액에서 대출공급액을 차감한 후 지원배수로 나누어 연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때 대출공급액은 신규 대출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반면 하나은행은 대출 미공급액 산정 시 대출한도액에서 대출공급액을 실제 대출 실행기간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약은행별로 대출공급액 산정 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의 대출 미공급분 이자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국공항공사의 2024년 기업은행, 하나은행 주요 협약 내용]

(단위: 백만원, 배)

구분	협약액	대출 한도액	지원 배수	이자정산방법(a*b)	
				정산대상금액(a)	금리 및 기간(b)
기업은행	4,000	9,000	2.25	대출미공급분에 해당하는 예탁금 = {(대출한도액 - 대출공급액)/지원배수}	연 이자율 * 예치기간
하나은행	1,000	1,000	1	대출미공급분 = {총대출한도 - 대출실행금액(평균잔액)}	기준금리 * 예치기간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기업은행의 이자 정산 방식을 하나은행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 추가 이자정산액은 당초 이자정산액 대비 약 1.81배에서 최대 11.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자 정산의 핵심 요소인 대출 미공급분의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대출 평균잔액 기준으로 대출 미공급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이자정산액을 추정하였다.

2021년의 경우 대출한도액 80억원 중 대출공급액은 76억원으로 미공급액은 4억원에 불과하여 이자정산액은 약 17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대출 평균잔액은 31.5억원으로, 총 대출공급액 76억원의 41.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협약기간 중 신규 대출의 인식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기업은행은 대출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공급액 전체를 한도에서 차감하는 반면, 하나은행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도에서 차감하여 대출 미공급분을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미공급액은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정되고, 그 결과 이자정산액

또한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추정 추가 이자정산액은 기존 170만원 대비 약 11.1배 증가한 1,893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21~2024년 기간 동안 기업은행을 통한 동반성장협력대출의 경우 대출 공급액이 대출 평균잔액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대출 미공급분이 과소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정산액은 평균 잔액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협약 체결 시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 및 이자 정산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적정 수준의 이자정산액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향후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 체결 시에는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과 이자 정산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기업은행 이자정산액 및 하나은행 방식 적용 시 추가 추정이자정산액]

(단위: 원, 배)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치금	4,000,000,000	4,000,000,000	4,000,000,000	4,000,000,000
예치이율	0.85%	1.90%	3.98%	3.80%
대출한도액	8,000,000,000	8,000,000,000	8,000,000,000	9,000,000,000
지원배수(A)	2.00	2.00	2.00	2.25
대출공급액(a)	7,600,000,000	7,575,000,000	6,595,000,000	7,695,000,000
대출평균잔액(b)	3,145,726,027	6,025,273,973	4,099,575,342	5,423,886,027
b/a	41.4%	79.5%	62.2%	70.5%
대출미공급액	400,000,000	425,000,000	1,405,000,000	1,305,000,000
평균잔액 기준 미공급액 (c=a-b)	4,454,273,973	1,549,726,027	2,495,424,658	2,271,113,973
추가 이자정산대상(c/A)	2,227,136,986	774,863,014	1,247,712,329	1,009,383,988
당초 이자정산액(e)	1,700,000	4,037,500	27,402,119	22,040,000
추정 추가이자정산액(f)	18,930,664	14,722,397	49,658,951	38,356,592
f/e	11.14	3.65	1.81	1.74
추가이익 추정액(f-e)	17,230,664	10,684,897	22,256,832	16,316,592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②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은행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3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협약에 따라 대출 미공급액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산받고 있으며, 3개 협약은행 모두 협약서상으로는 대출 미공급분 중 예탁금 해당분을 이자 정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자 정산 방식에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업은행의 경우 대출 미공급분을 산출할 때 대출한도액에서 대출공급액을 차감한 후 이를 지원배수로 나누고 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정산액을 산출하고 있다. 이때 대출공급액은 신규 대출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 누적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반면 하나은행과 iM뱅크는 대출 미공급분을 산정 시 대출한도액에서 차감하는 대출공급액을 실제 대출 실행 기간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024년 기업은행, 하나은행 주요 협약 내용]

(단위: 백만원, 배)

구분	협약액	대출 한도액	지원 배수	이자정산대상	
				정산대상금	실제 정산대상금액
기업 은행	25,000	60,000	2.4	대출미공급분에 해당하는 예탁금 = {(대출한도액 - 대출공급액)/지원배수}	대출미공급분에 해당하는 예탁금 = {(대출한도액 - 대출공급액)/지원배수}
하나 은행	15,000	45,000	3.0	대출미공급분 = {(총대출한도 - 대출실행금액(평균잔액))}	대출미공급분 = {(총대출한도 - 대출실행금액(평균잔액))}
iM뱅크	10,000	24,000	2.4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기업은행의 이자 정산 방식을 하나은행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2024년 동안 당초 이자정산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출 평균잔액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약 2,250만원~1억 7,670만원 수준의 이자정산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자 정산의 핵심 요소인 대출 미공급분 인식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은행은 대출 시점과 관계없이 신규 대출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 총 대출공급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액에서 차감하는 반면, 하나은행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액에서 차감하여 대출 미공급분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기업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대출 평균잔액 기준으로 대출 미공급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자정산액을 재계산하였다.

기업은행과의 협약서는 대출공급액이 대출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자정산액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2024년 기간 동안 총 대출공급액이 대출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이자정산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대출 평균잔액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협약기간 동안의 평균 대출잔액은 모두 대출한도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잔액이 협약기간 중 실제 대출이 운용된 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21~2024년 동안 기업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서는 당초 이자정산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평균잔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정 이자정산액은 총 약 4억 3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기업은행 이자정산방법을 하나은행 방식 적용 시 추가 추정 이자정산액 현황]
(단위: 원, 배)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치금	30,000,000,000	30,000,000,000	25,000,000,000	25,000,000,000
예치이율	1.05%	3.0%	3.62%	3.61%
대출한도액(B)	45,000,000,000	45,000,000,000	50,000,000,000	60,000,000,000
지원배수(A)	1.5	1.5	2.0	2.4
대출공급액(a)	45,172,000,000	45,776,000,000	51,956,000,000	62,883,000,000
대출평균잔액(b)	35,266,394,521	43,872,000,000	40,839,493,151	48,254,544,519
추정 대출미공급액(d=a-c)	9,733,605,479	1,128,000,000	9,160,506,849	11,745,455,481
지원배수 해당액(e=d/b)	6,489,070,319	752,000,000	4,580,253,425	4,893,939,784
당초 이자정산액(f)	0	0	0	0
추정 이자정산액(g=A*e)	68,135,238	22,560,000	165,805,174	176,671,226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③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표와 같이 기업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하여, 750~800억원 규모의 예탁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동반성장 협력대출 지원업체의 대출금리 인하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 따라 대출 미공급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산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출공급액이 대출한도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함에 따라 대출 미공급분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치금에 대한 이자정산액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기업은행)의 이자정산액]

(단위: 원)

구분	2023	2024	2025
협약액	75,000,000,000	80,000,000,000	80,000,000,000
대출한도액	150,000,000,000	160,000,000,000	160,000,000,000
대출공급액	194,037,329,998	165,739,800,000	163,433,969,998
대출미공급액	0	0	0
이자정산액	0	0	0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금 및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산정할 때 원금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에서도 대출 미공급분을 산정함에 있어 협약기간 동안의 대출 실행일수를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총 대출한도 중 대출 미공급분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이자를 산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대출 미공급분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이자정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규 대출 실행 시점이나 중도상환일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대출공급액에 반영함으로써, 예치금에서 차감되는 대출공급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가스공사(기업은행)의 협약서상 이자정산액 처리규정]

이자정산 규정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 지원한도 중 대출 미공급분에 대하여는 연 2.7%의 이율을 적용하고, 정산이자는 원천징수 후 만기일에 “공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에 본 분석에서는 협약 시작일 이후 대출이 실행된 지원업체의 대출 평균잔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이자 정산 시 적용된 대출공급액과 비교하였다. 다만 협약 시작일 이후 조기상환된 대출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는 확인이 곤란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약 시작일 이후 신규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 평균잔액은 대출공급액의 약 25.3~57.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은 대출공급액이 대출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이자정산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대출 미공급분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이자정산액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협약기간 중 실제 대출 실행 기간을 반영할 경우 대출 미공급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정산액이 과소 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가스공사(기업은행)의 협약기간 중 신규지원업체 대출공급액 vs 대출평균잔액]
(단위: 원)

구분	2023	2024	2025
협약기간	2024.4.27.~2025.4.27	2024.4.27.~2025.4.27	2025.4.27.~2026.4.27
대출공급액(a)	39,152,700,000	20,235,970,000	25,601,000,000
대출평균잔액(b)	9,856,030,137	8,139,222,904	14,614,854,795
차이금액(c=a-b)	29,296,669,863	12,096,747,096	10,986,145,205
b/a(비중)	25.2%	40.2%	57.1%
예탁이율(d)	2.47%	3.64%	3.59%
과소지급 이자추정액(c×d)	723,627,746	440,321,594	394,402,613

주: 연도별 협약일 이후 신규 지원업체에 대한 대출공급액과 대출평균잔액을 비교함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④ 한국산업단지공단 : 입출식 통장 활용 및 평균 예치금 미달 시 협약은행에 이자 지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협약은행인 기업은행과 두 종류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기업은행1 협약을 2026년 3월 현재 운영 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체결한 협약 중 기업은행1 협약에는 이자정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기업은행2 협약은 대출 미공급액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산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자정산 규정이 없는 기업은행1 협약의 경우, 타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기에 금이 아닌 입출식 예금 방식으로 예탁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입출식 예금의 평균잔액이 협약상 약정액에 미달할 경우 협약은행에 해당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이 대출 미공급분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평균잔액이 아닌 총액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공단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평균잔액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은행 1, 2 이자정산 관련 주요 협약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협약액	대출 한도액	대출지원용 예탁금	이자정산 관련 주요 내용
기업은행 1	37,500	50,000	입출식 예금	이자정산 없음
				입출식 보통예금 평균잔액 미달 시 은행에 이자 지급
기업은행 2	10,000	20,000	정기예금	$(\text{대출한도액} - \text{대출공급액}) / \text{자원배수} \times \text{연 이자율} \times \text{예치기간}$

주: 기업은행 2는 2024년까지 협약함에 따라 2025년에는 협약 종료됨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본 분석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기업은행1 협약)을 대상으로 대출 평균잔액 개념을 적용하여 실제 대출 실행 규모를 기준으로 대출한도액과의 차액(대출 미공급액)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협약서상 대출한도액은 5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2025년까지의 대출공급액과 대출 평균잔액 모두 해당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출 평균잔액이 대출한도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미공급액에 대하여 일정 이자를 정산받는 방식이 적용되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협약은행인 기업은행과 체결한 해당 협약에서 대출 미공급액에 대한 이자정산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협약에서는 예치금을 정기예금이 아닌 입출식 보통예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며, 예치금 평균잔액이 협약상 약정액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공단이 협약은행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약 구조로 인해 대출공급액과 대출 평균잔액이 대출한도액에 미치지 못하여 대출 미공급액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해당 미공급분에 대한 이자를 정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과 비교할 때 공단에 불리한 협약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협약 조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은행1 추정 이자정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배)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치금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예치이율	0.10%	0.10%	0.10%	0.10%	0.10%
대출한도액(a)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지원배수(b)	1.33	1.33	1.33	1.33	1.33
대출공급액	40,480	42,336	14,182	43,708	44,333
대출평균잔액(c)	37,649	39,707	14,182	43,708	43,934
추정 대출미공급액(d=a-c)	12,351	10,293	35,819	6,293	6,066
지원배수 해당액(e=d/b)	9,287	7,739	26,931	4,731	4,561
당초 이자정산액(f)	이자정산 규정 없음				
추정 이자정산액(g=A*e)	9.3	7.7	26.9	4.7	4.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소결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예탁금 이자정산 과정에서 협약은행별로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방식은 실제 대출 실행 규모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기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협약은행은 신규 대출 실행일이나 중도상환일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공급액을 단순 누적 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실제 대출 운용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미공급분을 계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미공급분이 과소 산정되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지급받아야 할 이자정산액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은행은 대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자금 운용기간을 반영하고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도 이자정산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 기관이 복수의 협약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이자정산액이 수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정산 구조의 불합리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는 협약 체결 시 이자정산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공기관에 불리한 조건이 그대로 수용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출 평균잔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대출 미공급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누적 방식에서는 대출공급액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자정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이자수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정책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현행 이자정산 방식은 협약은행에 유리하고 공공기관에 불리한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동일 제도 내에서도 정산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는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에 대해 협약은행과의 형식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여 공공기관에 불리한 산정 구조가 반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대출 실행일 및 중도상환일을 반영하지 않는 단순 누적 방식은 이자정산액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기간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의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등 이자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협약은행별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현황]

(단위: 백만원)

협약은행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업은행 방식 (대출 공급액 방식)	기업은행	904,500	926,000	669,000	618,476	575,961
	수협은행	3,500	3,500	0	3,500	3,500
	산업은행	0	0	90,000	90,000	0
	광주은행	0	0	0	0	4,000
	iM뱅크	22,000	22,000	20,000	20,000	20,000
	경남은행	0	0	0	0	10,000
	우리은행	0	0	49,193	0	0
	소계(a)	930,000	951,500	828,193	731,976	613,461
하나은행 방식 (대출 평균잔액 방식)	하나은행	43,000	193,220	26,000	28,000	27,000
	신한은행	11,000	11,000	1,000	2,000	2,000
	농협은행	0	0	8,000	8,000	0
	부산은행	15,000	15,000	0	0	10,000
	소계	69,000	219,220	35,000	38,000	39,000
합계(b)		999,000	1,170,720	863,193	769,976	652,461
대출공급액 방식 비중(a/b)		93.1%	81.3%	95.9%	95.1%	94.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사. 협약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공공성 미흡 문제

(1) 협약은행으로서의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 실행 현황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 정책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력을 위하여 대기업, 공공기관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2009년에 신설하였고, 동 상품이 동반성장협력대출이다.

기업은행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업의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은행이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기업³⁾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의 협약당사자로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및 공공기관 확대계획에 따라 기업은행은 2009년 협약 대기업 수 20개 기업, 예탁금 2,040억원으로 한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시작하였다⁴⁾. 이후 협약기업 및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말 기준으로 총 201개 협약기업의 4조 1,322억원에 이르는 예탁금을 재원으로 9조 44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은 6조 8,903억원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이 41개의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1개 협약이 기업은행을 협약은행으로 두고 있다. 공공기관은 31개 협약을 통하여 2025년 말 기준 총 5,760억원의 예탁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9,602억원의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총 2,892건, 약 7,750억원 규모의 대출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업은행 예탁금은 2021년 9,045억원에서 2022년까지 증가한 이후,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5년 말 기준 5,760억원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액, 대출한도 및 대출공급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이 최근 들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 변화, 정책 우선순위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개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협약액	904,500	926,000	669,000	618,476	575,961
대출한도	1,534,000	1,605,000	1,223,000	1,119,200	960,200
대출건수	4,540	4,356	3,684	3,911	2,892
여신 잔액	1,373,899	1,248,474	1,071,087	985,901	774,994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협약기업과의 '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4) 박민수,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수혜기업 재무성가에 미치는 영향(기업은행 거래기업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 기업은행의 협약은행분 지원업체 금리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필요

기업은행은 협약 공공기관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탁고를 확보하고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실행하는 핵심 협약은행으로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

2021~2025년 동안 공공기관의 협약은행별 예탁금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이 전체 예탁금의 약 65.9~91.0%를 차지하는 등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사실상 주요 협약은행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은행별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현황]

(단위: 백만원)

협약은행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업은행	954,500	976,000	668,300	622,976	575,961
농협은행	0	0	8,000	8,000	0
수협은행	3,500	3,500	0	3,500	3,500
하나은행	43,000	193,200	177,200	179,200	27,000
우리은행	0	0	49,193	0	0
신한은행	11,000	11,000	1,000	2,000	2,000
부산은행	15,000	15,000	0	0	10,000
iM뱅크	22,000	22,000	20,000	20,000	20,000
광주은행	0	0	0	0	4,000
경남은행	0	0	0	0	10,000
산업은행	0	0	90,000	90,000	0
합계(b)	1,049,000	1,220,700	1,013,693	925,676	652,461
기업은행 비중(a/b)	91.0%	80.0%	65.9%	67.3%	88.3%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또한 기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업체의 자산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2,266개 지원업체 중 고정 이하 여신은 14개사(0.86%)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으로도 0.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개사, %, 백만원)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자주 수	2,252	2	1	11	2,266
(비중)	99.14	0.12	0.06	0.68	100.00
여신	594,345	500	100	1,519	596,464
(비중)	99.61	0.09	0.02	0.28	100.00

주: 2025년 6월 말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와 함께 기업은행의 여신 구조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총 여신 298.7조원 중 82.6%가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채무불이행 시에도 회수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손충당금 부담을 낮추고 BIS비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예탁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며, 신용위험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순이자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 담보별 여신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부동산	동산	소계	유가증권 및 채권	기타	담보대출계 (a)
여신금액	1,891,474	3,987	1,895,462	37,577	31,359	1,964,398
비중	63.3	0.1	63.4	1.3	1.0	65.8
구분	보증대출(b)		신용대출(c)		합계(a+b+c)	
여신금액	503,407		519,586		2,987,391	
비중	16.9		17.4		100.0	

주: 2024년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포기하여 이를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경감에 활용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협약은행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금리 인하 재원을 기반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최종적으로 적

용금리와 예탁금리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는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평균잔액[(기초잔액+기말잔액)/2]에 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은행은 2021~2024년 동안 최대 약 523억원 수준의 이자수익 혜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관련 순이자마진 추정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합계
기업은행 이자수익 혜택 추정액(a=b×c)	12,371	15,651	13,922	10,396	52,339
예탁금 평균잔액(b)	819,260	879,260	777,750	615,138	-
순이자마진(NIM)(c)	1.51	1.78	1.79	1.6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러나 이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협약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금리 인하 수준 외에 자체적인 추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단순한 대출상품을 넘어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금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약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협약은행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금리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기술(주)의 협약은행인 신한은행은 협약액의 두 배 수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금리 인하에 더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적용함으로써 지원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의 핵심 협약은행으로서, 순이자마진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금리지원에 추가하여 자체적인 금리 인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협력대출이 단순한 자금 운용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협력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기술(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은행과의 주요 협약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전력기술(주) 협약액		1,000	1,000	1,000	1,000	2,000
대출한도		2,000	2,000	2,000	2,000	4,000
지원업체 지원금리(a+b)		1.0%	1.64%	4.50%	4.30%	3.52%
	한국전력 지원금리(a)	0.5%	0.82%	2.25%	2.15%	1.76%
	신한은행 추가 지원금리(b)	0.5%	0.82%	2.25%	2.15%	1.76%

자료: 한국전력기술(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3) 다수 협약 공공기관에 대출업체 중복추천에 따른 정책목적 훼손 문제

특정 기업이 여러 협약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제공하는 금리 지원을 받게 되면, 정책 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기회가 줄어들어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즉, 여러 협약기관이 동일 기업에 대해 각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정책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은행이 협약은행으로서 공공 부문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 중인 공공부문 간 지원업체 중복선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동반성장 협력대출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약은행 주도로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외 지방공기업,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대상 정부 유관기관 등 총 40개 공공부문과 협약을 체결 중이다.

[기업은행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체결 공공부문 현황]

(단위: 개)

유형	기관명	개수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공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 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조폐공사, 한국 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30
지방공기업	경상북도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5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등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국정감사 대상 정부 유관기관 등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증권금융	2
합 계		39

주: 한국과학기술지주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출자 중인 회사이며, 한국증권금융은 한국거
래소(11.14%)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공동 출자 중인 회사임
자료: 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복지
원 비율은 일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지
원을 받은 기업 수는 2020년 829개에서 2024년 1,22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업은행이 다수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일 기업에 대해 중복적으
로 대출을 공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실행 및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면서, 동일 기업이 다른 공공부문의 협약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
부를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의
공공기관이 동일기업을 지원하도록 추천하였다는 점은 기업은행 내 지원업체 풀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원업체 중복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동일업체가 여러 공공부문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중복지원받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동반성장협력대출제도에서 한 축을 구성하는 협약은행으로서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중소기업에게 고르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협약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중복지원 방지 조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복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협약은행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의 공공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중복선정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1개	중복선정업체						합계
			2개	3개	4개	5개	6개	소계	
2020	개수	4,626	698	114	12	5	0	829	5,455
	비중	84.8	12.8	2.1	0.2	0.1	0.0	15.2	100.0
2021	개수	7,313	1,042	216	24	10	0	1,292	8,605
	비중	85.0	12.1	2.5	0.3	0.1	0.0	15.0	100.0
2022	개수	7,720	1,178	228	52	15	6	1,479	9,199
	비중	83.9	12.8	2.5	0.6	0.2	0.1	16.2	100.0
2023	개수	9,437	1,158	204	24	10	0	1,396	10,833
	비중	87.1	10.7	1.9	0.2	0.1	0.0	12.9	100.0
2024	개수	9,508	970	195	56	0	6	1,227	10,735
	비중	88.6	9.0	1.8	0.5	0.0	0.1	11.4	100.0

자료: 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음은 기업은행이 협약은행인 주요 공공기관별 중복지원 사례이다.

① 협약은행이 기업은행으로 동일한 5개 발전자회사 간 지원업체 중복

기업은행이 협약에 따라 각 발전자회사별로 선정한 지원업체 중 2개 이상의 발전자회사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의 비중은 2020년 9.2%에서 2024년 16.1%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중부발전(주)은 2020년 14.5% → 2024년 15.6%, 한국동서발전은 2020년 13.3% → 2024년 16.4%로 중복지원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타 발전사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업체 수가 2020년 전체 40개 중 8개에서 2024년에는 전체 64개 중 16개(25.0%)로 증가하여 중복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1차적인 원인은 발전사들이 사업운영 과정에서 지원업체 중복에 대한 관리·점검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은 발전사 간 지원업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일업체가 복수의 발전자회사로부터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중복 지원받도록 추천한 것도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한정된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도록 하여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특히 기업은행이 협약은행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복지원 관리 및 조정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제도 운영상 중요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 간 동일지역 내 지원업체 중복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동일한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지원업체를 비교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를 기준으로 총 98개 업체가 예금보험공사 지원업체와 중복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이 예금보험공사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지원업체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일지역 내 지원업체 중복이 발생한 것은 기업은행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별 동반성장협력대출 지원업체가 타 공공기관과 중복됨을 인지하고도 공공기관별 대출한도를 보다 용이하게 채우기 위하여 타 공공기관의 지원업체를 지속적으로 활용함에 기인한다.

[2024년 한국가스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중복지원업체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공사 추천업체	대구경북			합계
		우수기술력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업체 수	1	48	46	3	98
대출잔액	500	10,176	6,664	700	18,040

자료: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③ 타 협약은행과의 특정업체 중복 지원

일부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동반성장협력대출로는 최대치인 67.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항만공사에서도 동일업체에 지원한도액인 5억원을 2021~2026년까지 4.8년 동안 지속적 지원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동 업체를 해운항만물류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동반성장업체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협약기관과 협약은행이 상이하지만 동일업체가 최대 72.9억원까지 대출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간 지원업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공공기관별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 유형 현황]

(단위: 백만원)

공공기관명	협약은행	지원 대상 유형	지원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동반성장업체	6,799
부산항만공사	기업은행	해운항만물류기업	500
합 계			7,299

자료: 공공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기업은행의 이자정산 산정 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불이익 발생 및 개선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이자정산 과정에서 협약은행 별로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기업은행은 협약기간 중 신규 대출 실행일이나 중도상환일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공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미공급분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협약기관인 공공기관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정산과정에서 실제 대출 실행 기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자정산액 중 일부는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의 이익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분석에서 수행한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사례를 대상으로 평균잔액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기업은행 방식과의 차이에 따라 대출 미공급분과 이자정산액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기관이 여수신에 대한 이자수익(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일수를 반영한 평균잔개념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평잔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누적 방식으로 대출공급액을 산정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자정산액을 축소시켰다.

이는 기업은행의 산정방식이 공공기관이 지급받아야 할 이자정산액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기업은행이 협약은행으로 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 규모는 연도별로 5,760억원에서 9,26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공공기관 예탁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비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적용될 경우 공공기관에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협력대출과 같은 상생협력 정책사업에서 공공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자정산 방식을 협약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한 영리 목적을 넘어 정책금융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에 있어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대출 실행일 및 중도상환일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의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등 이자정산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정책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이자 동반성장협력대출의 핵심 협약은행으로서, 동 사업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 결과, 기업은행은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정책금융 수행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 구조를 확보하고, 낮은 신용위험 구조를 통해 상당한 이자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력 중소기업과 충분히 공유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지원 노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상생협력 정책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약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업은행은 다수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추천 및 중복지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은행은 대출 미공급분 이자정산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지급받아야 할 이자정산액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는 이자정상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한 영리 목적을 넘어 정책금융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불리한 정산 구조를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은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협약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리지원 확대, 중복지원 방지체계 구축, 이자정산 방식의 합리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정책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실질적인 상생협력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의 주요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과 협약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기업들에게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동 사업은 2025년 말 기준으로 28개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이며, 3,592개의 중소기업에 9,214억원에 대한 금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규모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협약은행 중심의 지원업체 선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협력업체로의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 둘째, 공공기관 간에 일부 중소기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셋째, 협약서상 대출기간, 대출한도를 명시하지 않거나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일부 기관을 장기간 지원하는 문제, 넷째, 대출한도액 대비 낮은 대출공급 지원 문제와 사업 부진에 따른 예탁금 유흡화 문제, 다섯째, 협약은행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자정산하는 문제, 여섯째, 주된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의 공공성 미흡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금리지원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원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본래 공공기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전국 단위 일반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 기관 고유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전체 지원업체 중 공공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고, 산업연관성이 미흡하며, 기관 간 중복지원까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

원업체 선정에 적극 관여하고, 협력업체 중심의 지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고유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생협력 효과와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 간 지원업체 정보 공유 및 협약은행 관리 강화를 통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금융 제도이다. 그러나 동일 기업이 여러 협약기관으로부터 동시에 금리 지원을 받는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 한정된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지원 기회의 분산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공공부문간 지원업체 중복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 수는 2020년 829개에서 2024년 1,227개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은행이 다수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동반성장협력대출은 협약은행이 지원업체 선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동일기업이 타 공공기관 협약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인지·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동일 기업을 다수의 공공기관 지원 대상으로 반복 추천하거나 중복 선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협약은행으로서 수행해야 할 관리조정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운영은 정책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규 협력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우대 또는 특혜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협약은행마저 중복지원 방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효과 제고가 구조적으로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지원업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이 중복

지원 관리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공공기관별 지원기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신규 지원업체 선정 시 타 기관 지원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차단 또는 조정 기준을 도입하고, 협약 체결 시 중복지원 방지 조항을 명확히 하여 미지원 또는 신규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자금의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 명확화와 협약 준수 관리 강화를 통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한정된 정책자원을 활용하여 다수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에 따라, 지원이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출기간은 특정 기업에 대한 장기·반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 기회의 순환을 유도하는 기준이며, 대출한도는 개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집중을 방지하여 정책자금의 기업에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는 핵심적인 통제 장치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전체 41개 협약 중 20개(58.5%)가 협약서에 대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체 지원업체 중 3년 이상 장기 지원 비중이 38.3%에 달하고 일부 기관은 70%를 상회하는 등 장기·반복 지원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신규 지원기업 비중은 6.4%에 불과하여 정책자금의 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약서상 기준 부재로 인해 동일 기업에 대한 지원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구조가 형성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대출한도 미설정 또는 협약 기준 미준수로 인해 특정기업에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동일기업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최대 67.9억원 규모의 대출에 금리혜택이 집중되는 등 지원 편중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서도 대출기간 미명시에 따라 장기 지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협약서상 규정된 대출기간 및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일부 기업에 대

한 장기·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협약 기준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미흡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 지원기업 중심의 반복 지원 구조가 형성되면서 신규 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정책 수혜 대상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협약 기준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미흡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 지원기업 중심의 반복 지원 구조가 형성되면서 신규 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정책 수혜 대상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아닌 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정책 목적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협약서에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지원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기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자금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출한도 대비 공급실적 제고 및 수요에 기반하여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대출한도 대비 실제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적 부진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대출한도 설정, 지원조건 및 절차의 복잡성, 낮은 신청 수요 등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장기 지원기업 중심의 운영으로 신규 기업 유입이 제한되고, 공급 부진이 지속됨에도 한도 조정이나 운영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정책자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로 유휴화되고, 동반성장협력대출이 지향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협력기업의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대출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한도 조정,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개선 등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탁금 운용 효율화 및 이자 지원금 방식 전환을 통한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예탁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하여 예탁금이 금융지원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유휴자금으로 남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대출한도 대비 미공급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일부는 80% 이상에 이르는 등 대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예탁금이 유지되면서 정책자금이 금융기관에 장기간 예치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효과 대비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재무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하다가 사후적으로 협약을 종료하는 등, 대출 수요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예탁금 중심 운영방식이 실제 대출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채 자금이 선투입되는 구조에 기인한다. 즉,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의 자금이 금융기관에 묶이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예탁금 활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협력대출 재원 운용방식은 예탁금 전액을 사전에 예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대출 실행 규모에 연동하여 필요한 이자지원 재원만을 산정·예치하는 이자지원금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출 실행액 또는 대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지원 소요액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만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대출 수요와 재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탁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대출공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탁금 축소, 협약 조건 조정, 사업 구조 개선 등 선제적인 관리조치를 통해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재원의 비효율적 적립을 방지하고, 정책자금이 실제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출미공급분 이자 정산 방식 부적정에 따른 공공기관 예치금 이자분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협약은행에 예탁한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협약 종료 시 또는 협약기간 중 대출 미공급분에 대한 이자정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분석 결과, 협약은행별로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이 상이하여 동일한 예탁금 구조임에도 공공기관이 지급받는 이자정산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약은행 중 기업은행은 협약기간 중 신규 대출 실행일이나 중도상환일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누적 기준의 대출공급액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제 대출 실행 기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대출 미공급분이 구조적으로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정 방식의 차이를 넘어, 공공기관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이자정산액이 체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대출공급액 기준으로 이자정산을 받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사례를 평균잔액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협약서상 기존 방식으로는 이자정산액이 없거나 소액에 그쳤으나, 평균잔액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한 규모의 추가 이자정산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례에서는 대출 미공급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자정산 규정 자체가 없고, 오히려 예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협약은행에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까지 확인되어 공공기관에 불리한 협약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협약 체결 시 이자정산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지급받아야 할 이자정산액이 과소 산정되거나 아예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예탁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비합리적인 정산 방식의 영향은 공공부문 전반에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향후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는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신규 대출 실행일 및 중도상환일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의 산정 방식을 표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약은행별로 상이한 이자정산 구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공공기관에 불리한 조건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대출 미공급분에 대한 이자정산 체계를 제도적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주된 협약은행인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에 있어 대출 미공급분 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신규 대출 실행일 및 중도상환일을 반영한 평균잔액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자정산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은행으로서 공공성 강화 및 정책금융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을 주된 역할로 수행하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으로서, 동반성장협력대출 프로그램의 핵심 협약은행으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 공공기관이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예탁금 규모 또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협약은행으로서 요구되는 공공성 및 정책금융 수행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측면이 확인되었다.

먼저,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과정에서 안정적인 예탁금 기반과 낮은 신용위험 구조를 바탕으로 상당한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 상생협력 확대 노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확보한 이익을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기업은행은 다수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전체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일 기업이 복수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정책자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협약은행으로서 수행해야 할 관리·조정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은 대출 미공급분 이자정산 과정에서 신규 대출 실행일이 나 중도 상환일을 반영하지 않는 단순 누적 방식의 산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취할 이자수의 혜택을 착복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지급받아야 할 이자정산액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은행은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 확대 노력 부족, 중복지원 관리 미흡, 이자정산 구조의 불합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협약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정책금융 수행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반성장협력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공공기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개요

(1) 설치 목적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상생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⁵⁾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재무 여건이 취약해지면서 이는 주요 경제·사회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생협력 촉진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제정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⁶⁾이 신설되어 대기업 등이 협력사 지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이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7년에는 상생협력법 제20조의5⁷⁾가 신설되어 상생협력기금의 설치와 그 사용 용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자원 및 용도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출연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출연기업은 출연금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상생협력재단은 출연기업이 지정한 용도와 사업에 맞게 출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 기금의 사용 용도는 대·중소기업 간 ①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②기술협력 촉진 사업, ③인력교류 확대 사업, ④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⑤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이다.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8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

근거	내용
상생협력법 제20조의5제5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생협력법시행령 제13조의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사업 유형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등 총 16개이다.

2024년에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사업,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벤처투자조합출자사업이 신설되었으며, 민관공동협력 창의트랙사업, 민관공동협력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민관공동협력 공급망 ESG 지원사업이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상생협력기금 활용 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상생협력)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R&D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 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혁신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역량 강화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성과공유제	위탁·수탁기업 간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민간자율기획사업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자율(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상생협력 활동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	NFC, QR 등 신결제 인프라 확산 및 키오스크 도입을 통합 영세가맹점 지원	-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력 중소기업의 ESG 교육 및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ESG 정보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지역소멸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지역사회 맞춤형 상생협력 과제 발굴 및 수행	2024년 신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재정적으로 지원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협력중소기업 등에게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	"
벤처투자조합출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민관공동협력 창의트랙사업	대·중소기업이 자율 기획한 창의적 상호 윈윈 모델을 심사·선정하여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	2025년 신설
민관공동협력 영세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영세 중소·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신제품·신사업 개발을 지원	"
민관공동협력 공급망 ESG 지원사업	ESG지표 및 체계구축, 역량진단, 교육·컨설팅 등 공급망 차원의 ESG지원	"

자료: 상생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s://www.win-win.or.kr>),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winwingrowth.or.kr>)

상생협력기금사업은 사업에 따라 재원의 구성이 상이하다. 일부 사업은 기금만으로 100% 지원이 이루어지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과 상생협력기금이 매칭되어 운영되고,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한다.

[상생협력기금사업의 자원 구성별 현황]

자원 구성	사업명
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성과공유제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민간자율기획사업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력사 ESG 지원사업
상생협력기금-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민관공동협력 창의트랙사업
	민관공동협력 공급망 ESG 지원사업
상생협력기금 -정부-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사업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민관공동협력 영세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자료: 상생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운영 체계

상생협력기금은 먼저 출연기업과 상생협력재단이 출연시기, 금액, 지원사업 등 출연에 대해 협의한 뒤 출연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이후 출연기업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행할 지원 과제를 제안하거나 신청하게 되며, 제출된 과제는 상생협력재단의 검토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과제가 확정되면 출연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과제 수행이 완료되면 상생협력재단이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체계]



자료: 상생협력재단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1) 연도별 출연 및 지원현황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조성액은 2021년 1조 8,33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말 기준 3조원을 넘어섰고, 누적 출연기업 수도 2021년 335개에서 2025년 492개로 확대되었다. 누적 지원금액 역시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2조 8,98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85만 1,187개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출연 규모와 참여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의 연도별 출연·지원 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연	누적 금액	18,330	22,693	26,563	28,887	31,618
	(순증)	(3,683)	(4,363)	(3,870)	(2,324)	(2,730)
	누적 기업 수	335	386	417	441	492
	(순증)	(61)	(51)	(31)	(24)	(51)
지원	누적 금액	15,363	18,789	23,151	25,991	28,986
	(순증)	(2,574)	(3,426)	(4,361)	(2,840)	(2,995)
	누적 기업 수	268,728	422,217	577,456	725,088	851,187
	(순증)	(110,482)	(153,489)	(155,239)	(147,632)	(126,099)

주: 1. 2025. 12. 31. 누적 기준

2. 출연기업 수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수, 지원기업 수는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수를 말함

자료: 상생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유형별 출연 및 지원현황

출연기관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민간부문이 출연 금액의 85.8%와 출연기업 수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각각 14.2%와 24.2%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규모와 지원한 기업 수 또한 민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당 금액을 살펴보면, 출연기업당 출연금은 민간이 약 72.7억 원으로 공공기관(약 37.7억 원)의 약 2배인 반면, 지원한 중소기업당 지원금액은 공공기관이 약 1,100만 원으로 민간(약 300만 원)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기관 유형별 출연·지원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출연			지원		
	민간 (대기업·중견기업)	공공 기관	합계	민간 (대기업·중견기업)	공공 기관	합계
금액 (비중)	27,134 (85.8)	4,484 (14.2)	31,618 (100)	24,644 (85.0)	4,342 (15.0)	28,986 (100)
기업수 (비중)	373 (75.8)	119 (24.2)	492 (100)	812,916 (95.5)	38,271 (4.5)	851,187 (100)
기업당 금액	72.7	37.7	64.3	0.03	0.11	0.03

주: 1. 2025. 12. 31. 누적 기준

2. 출연기업 수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수, 지원기업 수는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수를 말함

자료: 상생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공공기관 출연현황

① 출연기관 현황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공공기관 수는 2021년 87개에서 2022년 94개로 증가한 이후 2023년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106개, 2025년 111개로 다시 확대되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출연 공공기관 수]

연도	(단위: 개)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기관 수	87	94	95	106	111

주: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제외

자료: 상생협력재단

2026년 1월 기준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공공기관은 총 111개로 전체 공공기관 342개 중 약 32.5%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30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6개), 준정부기관 54개(기금관리형 12개, 위탁집행형 42개), 기타공공기관 27개가 출연하였다.

[2025년 상생협력기금 출연 공공기관 유형별 현황]

유형 (공공기관 수)		공공기관명
공기업 (30)	시장형 (14)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1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54)	기금관리형 (12)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기타공공기관 (27)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 1. 2026년 1월 지정된 342개 공공기관 기준(부설기관 제외)
 2. 예산이 아닌 임직원들의 모금 등으로 출연한 기관을 포함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출연금 현황

공공기관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25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2021년 539억원에서 2022년 401억원으로 약 25.6% 감소했는데, 이는 금리 인상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후 2023년 352억원(△12.2%), 2024년 321억원(△8.8%)으로 감소세가 이어진 것은 코로나 확산 이후 확대되었던 재정 지출이 점차 정상화되고, 전반적인 긴축 재정 기조가 지속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2025년에는 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7% 증가하며 반등했는데, 이는 대외 경제 여건이 일부 안정되고 기관들의 출연 여력이 회복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출연액]

(단위: 억원,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연액	539	401	352	321	394
전년 대비 증감률	-	△25.6	△12.2	△8.8	22.7

자료: 상생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분포를 보면, 10억원 이상을 출연한 기관이 17곳으로 해당 기관들이 출연한 금액이 전체 출연금 394억원 중 312.7억원(79.4%)을 차지해 대부분의 금액이 공기업 중심의 소수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이 26개 기관, 76.4억원(19.4%)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1억원 미만 구간은 금액 비중(1.2%)은 낮지만 총 68개 기관(1천만원~1억원 14개, 1백만원~1천만원 40개, 100만원 미만 14개)이 집중되어 있어 전체 참여기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여러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소액이라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예산이 아닌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있는데, 1천만원 이하의 금액 구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분포]

(단위: 백만원, %)

구분 (공공기관 수)	공공기관 명	금액 (비중)
10억원 이상 (17)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31,270 (79.4)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6)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7,645 (19.4)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해양환경공단	346 (0.9)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40)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코레일유통(주),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9 (0.3)
100만원 미만 (14)	국립공원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재정정보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7 (0.0)
합 계		39,387 (100.0)

주: 1. 2026년 1월 지정된 342개 공공기관 기준(부설기관 제외)

2. 예산이 아닌 임직원들의 모금 등으로 출연한 기관을 포함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사업별 현황

전체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의 사업별 지원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5년간 58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29.1%)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비중은 2021년 34.4%에서 2025년 21.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자율기획사업,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등은 동일한 기간동안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성과공유제는 그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협력사 ESG 지원사업,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등은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금사업의 방향이 ESG, 기술보호, 지역사회 가치 등 새로운 영역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의 사업별·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상생협력)	18,517 (34.4)	12,855 (32.0)	10,097 (28.7)	8,136 (25.3)	8,531 (21.7)	58,136 (29.1)
민간자율기획사업	6,898 (12.8)	5,369 (13.4)	4,579 (13.0)	5,613 (17.5)	7,238 (18.4)	29,697 (14.9)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6,287 (11.7)	4,834 (12.0)	4,865 (13.8)	5,523 (17.2)	6,772 (17.2)	28,281 (14.2)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6,484 (12.0)	4,033 (10.0)	4,176 (11.9)	5,086 (15.8)	6,531 (16.6)	26,310 (13.2)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3,619 (6.7)	4,635 (11.6)	4,080 (11.6)	3,907 (12.2)	4,727 (12.0)	20,968 (10.5)
성과공유제	6,549 (12.2)	3,699 (9.2)	2,124 (6.0)	2,829 (8.8)	2,987 (7.6)	18,188 (9.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230 (0.4)	115 (0.3)	100 (0.3)	60 (0.2)	393 (1.0)	898 (0.5)
협력사 ESG 지원사업	0 (0.0)	510 (1.3)	646 (1.8)	765 (2.4)	1,730 (4.4)	3,651 (1.3)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0 (0.0)	0 (0.0)	0 (0.0)	125 (0.4)	222 (0.6)	347 (0.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0 (0.0)	0 (0.0)	0 (0.0)	3 (0.0)	31 (0.1)	34 (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사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민관공동협력 공급망 ESG 지원사업	0 (0.0)	0 (0.0)	0 (0.0)	0 (0.0)	180 (0.5)	180 (0.1)
민관공동협력 창의트랙 사업	0 (0.0)	0 (0.0)	0 (0.0)	0 (0.0)	48 (0.1)	48 (0.0)
민관공동협력 영세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산업혁신운동	4,308 (8.0)	3,347 (8.3)	3,526 (10.0)	0 (0.0)	0 (0.0)	11,181 (5.6)
혁신주도(PR챌린지)	790 (1.5)	560 (1.4)	856 (2.4)	86 (0.2)	0 (0.0)	2,292 (1.2)
협력이익공유제	183 (0.3)	172 (0.4)	154 (0.4)	4 (0.0)	0 (0.0)	513 (0.3)
합 계	53,865 (100.0)	40,129 (100.0)	35,203 (100.0)	32,136 (100.0)	39,388 (100.0)	200,721 (100.0)

주: 산업혁신운동, 혁신주도(PR챌린지), 협력이익공유제 사업은 종료됨
 자료: 상생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개선 필요

(1) 성과공유제 개요

성과공유제란 위탁·수탁기업 간 사전에 약속된 공동의 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⁸⁾

성과공유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위탁·수탁 기업 간 협력유형 및 목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수탁 기업은 신제품·신기술 개발, 해외 동반 진출, 기술이전, 공정개선, 성능개선, 원가절감, 관리시스템 개선 등 공동의 혁신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②이를 반영한 성과공유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해당 계약에는 성과공유과제의 목표와 이를 위해 위탁·수탁기업이 어떠한 노력을 수행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③성과의 달성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방식으로 성과가 공유되어야 한다. 성과공유의 방법으로는 현금 배분, 물량·매출의 증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평가가 가능한 성과물의 공유 등이 있다.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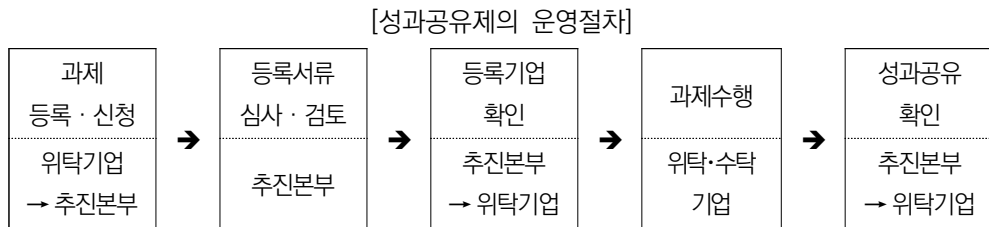
① 목표합의	② 사전계약체결	③ 성과공유
▶ 협력유형 협의 및 목표합의	▶ 사전 성과공유 계약체결	▶ 합의된 성과의 공유
· 신제품신기술개발, 해외동반 진출, 기술이전, 공정개선, 성능개선, 원가절감, 관리 시스템개선 등	·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수탁기업의 공동노력, 성과의 공유방법 등을 명시	· 성과공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성과공유(현금배분, 물량·매출확대)

자료: 상생협력재단, 「2024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실적보고서」, 2025. 2.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성과공유제의 운영 절차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상생협력재단 산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에 과제를 등록한다. 그리고 추진본부의 심사·검토·확인을 거친 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수행이 완료되어 성과가 도출되면 현금 배분 또는 물량·매출 확대 등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위탁·수탁기업 간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본부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위탁·수탁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현금배분의 공유방식을 선택한 경우, 추진본부가 등록과제의 목표 달성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상생협력기금에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으로 교부하게 된다.



자료: 상생협력재단,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실적보고서」, 2026.2.

성과공유과제의 모델은 협력유형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신제품·신기술 개발, ②해외동반 진출, ③기술이전, ④공정개선, ⑤성능개선, ⑥원가절감, ⑦관리 시스템개선, ⑧서비스 용역개선이다. 위탁·수탁기업은 성과공유과제의 유형 및 이에 따른 목표를 설정·합의하여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성과공유과제 유형]

유형	내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해외동반 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고 품질, 비용 및 납기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원가절감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외주비, 물류비 등의 절감을 수탁기업이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해당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개선을 목표로 수탁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비용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서비스 용역개선 ¹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시설, 설비를 유지 보수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주: 2026. 3. 31. 기준

자료: 상생협력재단, 「성과공유확인제 운영지침」

2025년 공공기관의 성과공유 유형을 보면, 서비스용역 개선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62개의 공공기관 중 31개의 기관이 당해 연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서비스 용역개선을 목표로 성과공유제를 체결하였고, 2025년 공공기관의 성과공유 확인 과제 735건¹¹⁾ 중 285건(38.8%)이 서비스용역 개선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성과공유확인제 운영지침」 개정(2026. 4. 1.)으로 서비스 용역개선 유형 삭제

11) 상생협력기금으로 성과공유제 현금공유를 하는 확인 과제에 한함

[2025년 공공기관의 성과공유 유형 중 서비스용역 개선의 비중]

(단위: 개, %)

구분	서비스용역 개선 유형	서비스용역 개선 이외의 유형	합계
공공기관 수	31	35	66
성과 과제 수 (비중)	285 (38.8)	450 (61.2)	735 (100.0)

주: 공공기관 수는 서비스용역 개선 유형과 서비스용역 개선 이외의 유형 간 중복이 있음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서비스 용역개선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시설 유지보수, 운영관리, 위탁용역 등 다양한 서비스 계약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투자나 기술개발 없이도 기존 용역 과정에서 용이하게 성과 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운영 중심의 업무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유형의 성과공유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이러한 경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개선 필요

첫째, 일부 공공기관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 통상적인 용역 계약 이행 결과를 성과로 보아 현금 배분의 형태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026년도 기관 다이어리와 달력 제작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성과공유제를 등록하였다. 해당 성과공유 계약서를 살펴보면, 과제명은 '2026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다이어리 및 달력 제작'이며, 과제의 목표는 '다이어리 900부 및 달력 1,200부 계약기간 내 제작'이다. 이는 일반적인 인쇄·제작 용역 계약에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납품 수량과 기한을 명시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과공유제에서 말하는 성과란 위탁·수탁기업이 공동의 혁신 활동을 통해 창출된 원가절감 등의 추가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설정한 과제의 목표는 계약상의 기본 의무의 이행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과공유제에서 말하는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2025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과공유 과제]

과제명	과제의 목표	성과의 공유
2026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다이어리 및 달력 제작	- (정량) 다이어리 900부 및 달력 1,200부 계약기간 내 제작 - (정성) 기관 임직원 대상 양질의 다이어리 및 달력 제공	현금 인센티브 100만원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5년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100만원 전액을 용역 계약업체 10개에 성과공유제 사업의 현금 인센티브로 집행하였다.

세차전문업체와 체결한 성과공유제를 살펴보면, 과제명은 ‘공용차량 관리 서비스를 통한 안전 경영 협력’이고, 과제의 목표는 ‘차량 관리 서비스 주 2회 이상, 수행 평가 결과 90점 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용역의 이행 정도나 관리 수준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계약 관리 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과공유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목표의 설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보안기록물 폐기업체와 체결한 성과공유제의 목표인 ‘월 1회 파기 시행, 기관 보안사고방지를 위한 노력’, 실내조경업체와 체결한 성과공유 목표인 ‘과제 기간 내 3회 이상 방문 관리, 사무공간 환경 개선 및 실내 공기질 개선 향상 도모’ 역시 통상적인 계약상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이행을 성과로 보아 현금 배분의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성과공유 과제]

과제명	과제의 목표	성과의 공유
공용차량 관리 서비스를 통한 안전경영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 기관 소유 차량 전체 관리서비스 주 2회 이상 시공 성과공유제 수행결과 검토 평가 90점 이상 - (정성) 안전운전을 위해 정기적 관리, 내외부고객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자 업무 효율성 증대 	현금 인센티브 10만원
보안 파기 전문업체를 통한 문서보안 강화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 파기 요청에 응하여 실제 파기를 시행 성과공유제 수행결과 검토 평가 90점 이상 - (정성) 기관 보안사고 안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파기 과정의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는 등 철저한 관리 이행 	현금 인센티브 10만원
실내공기정화 식물 설치를 통한 그린오피스 도입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 공기정화식물 과제 기간 내 3회 이상 방문 관리 성과공유제 수행결과 검토 평가 90점 이상 - (정성) 사무공간 환경 개선 및 실내 공기질 개선 향상 도모, 그린오피스 도입 	현금 인센티브 10만원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역시 2025년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250만원 전액을 기관의 용역 계약업체와의 성과공유제로 집행하면서, 통상적인 용역의 결과물을 성과공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수지자체 국외 정책 연수 운영 용역에 대해 목표로 설정한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사전 교육 자료집’과 조직몰입도 조사 용역 과제의 목표인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관련 전산 자료’ 등은 용역수행 과정의 당연한 산출물이며, 위탁·수탁 기업 간 공동의 노력에 의한 성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2025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성과공유 과제]

과제명	과제의 목표	성과의 공유
2025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우수지자체 국외정책연수 운영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 용역수행결과보고서 1부, 방문국가 및 기관 관련 사전 교육자료집 제작 - (정성) 주요 선진도시 정책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각 지자체 사업추진 담당자 역량 제고 	현금 인센티브 25만원
2025년 조직 몰입도 조사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1부, 설문자료 통계분석 등 전산 자료 일체 - (정성) 내부 구성원 소속감 및 업무몰입도 진단을 통한 처우개선 소통문화조성 등 조직문화 활성화 	현금 인센티브 25만원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외벽청소업체 및 전기안전관리업체와의 용역에 대하여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제의 목표를 각각 ‘안전사고 ZERO 달성’, ‘전기사고 방지 노력’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역시 용역 수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25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성과공유 과제]

과제명	과제의 목표	성과의 공유
HF미래인재원 외벽청소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 안전사고 ZERO 달성: 수탁기업의 산재보험금 지급 건수 외벽청소 만족도 90점 이상(담당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 (정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외벽청소를 통해 쾌적한 HF미래인재원 외벽 환경 구축 	현금 인센티브 40만원
HF미래인재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 전기사고 방지 노력(목표 0건)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에 따른 사고 방지 노력(목표 0건) - (정성) 전기사고 예방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를 통한 연수시설의 안전 확보와 신뢰성 유지 	현금 인센티브 35만원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성과공유제는 신제품·신기술 개발, 해외동반 진출, 기술이전, 공정개선, 성능개선, 원가절감 등 위탁·수탁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적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다이어리 제작, 세차, 외벽청소 등 기관의 고유업무 및 특성과 무관한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성과공유제를 체결하여 통상적인 용역계약의 수행을 성과로 인정하는 것은 성과공유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성과공유확인제 운영지침」이 서비스용역 개선 유형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 기준 없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¹²⁾ 또한 성과공유제 전 과정의 등록·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추진본부가 과제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2) 「성과공유확인제 운영지침 개정」(2026.4.1.)으로 서비스용역 개선 유형은 삭제됨

둘째, 일부 공공기관에서 성과공유과제의 목표를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성과와 무관하게 목표 달성이 용이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관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과 성과공유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제의 목표를 ‘품질 80점 달성’으로 설정하고,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한 품질 조사 결과 점수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25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성과공유 과제]

과제명	과제의 목표	성과의 공유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2층 기록관 단열작업	- (정량) 과제 목표: 품질 80점 달성 - (정성) 용역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위탁기업의 용역품질 제고	현금 배분 190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가족친화 프로그램 대행 용역	- (정량) 과제 목표: 품질 80점 달성 - (정성) 용역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위탁기업의 용역품질 제고	현금 배분 130만원
2025년 남동산단 퇴근길 문화콘서트 기획운영	- (정량) 과제 목표: 품질 80점 달성 - (정성) 용역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위탁기업의 용역품질 제고	현금 배분 100만원
2025년 산업단지 항공촬영 용역	- (정량) 과제 목표: 품질 80점 달성 - (정성) 용역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위탁기업의 용역품질 제고	현금 배분 160만원
2025년 경산4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 용역	- (정량) 과제 목표: 품질 80점 달성 - (정성) 용역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위탁기업의 용역품질 제고	현금 배분 70만원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연구재단도 여러 인쇄·출판 업체들과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 임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 80점 이상 달성’을 과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25년 한국연구재단 성과공유제 현황]

용역업체	과제명	과제의 목표	성과공유
아○○○ ○○○	인쇄물 질적 향상(납품 기한 품질 서비스)을 위한 성과공유 추진	- (정량) 인쇄업체 대상 내부 임직원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 - (정성) 인쇄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현금 10만원
디○○○ ○○○○	인쇄물 질적 향상(납품 기한 품질 서비스)을 위한 성과공유 추진	- (정량) 인쇄업체 대상 내부 임직원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 - (정성) 인쇄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현금 10만원
에○ ○○○	인쇄물 질적 향상(납품 기한 품질 서비스)을 위한 성과공유 추진	- (정량) 인쇄업체 대상 내부 임직원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 - (정성) 인쇄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현금 10만원
세○○○ ○○○ ○○○	인쇄물 질적 향상(납품 기한 품질 서비스)을 위한 성과공유 추진	- (정량) 인쇄업체 대상 내부 임직원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 - (정성) 인쇄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현금 10만원
(주)계○○	인쇄물 질적 향상(납품 기한 품질 서비스)을 위한 성과공유 추진	- (정량) 인쇄업체 대상 내부 임직원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 - (정성) 인쇄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현금 10만원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성과공유제의 성과는 위탁·수탁기업 간 공동의 노력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치에 대한 공유를 의미하므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품질 점수나 만족도 점수 등과 같은 목표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성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성과 자체 및 성과 달성 여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공유 과제의 달성 실적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점수에 반영된다는 점¹³⁾에서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

13)

[성과공유제도 관련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

단위지표	세부지표	평가기준						
성과공유 제도	①성과공유 과제 등급	등급	S	A	B	C	D	E
		점수	1.0	0.8	0.6	0.4	0.2	0

공기관 담당자 및 임직원들은 기관의 동반성장평가 점수 관리를 위해 성과를 과다 평가하여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인정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공기관이 평가의 주체이면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직원의 평가 점수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는 무관하게 달성이 용이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요건만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과공유제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다른 지원사업의 효과를 성과공유제로 활용하는 문제

일부 공공기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와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되는 결과를 성과공유 과제의 목표로 설정, 이의 달성을 근거로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10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기업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성과공유 목표 달성에 대하여 기업당 1,220만원을 현금공유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②성과공유 과제 확인 실적	공기업형	25건 이상	19~24건	13~18건	7~12건	1~6건
		준정부· 기타형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1~3건
		점수	2.0	1.6	1.2	0.8	0.4
	③성과공유 공유실적	- 성과공유 금액					
		성과공유 분포율	상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점수	2.0	1.6	1.2	0.8	0.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침」

[2025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 및 성과공유제 현황]

(단위: 천원)

업체명	협력사 ESG 지원사업 집행액	성과공유제 집행액
영○○○	4,000	12,200
(주)한○○○○○○○○	4,000	12,200
주식회사 대○○○	4,000	12,200
(주)안○○○○○○○	4,000	12,200
(주)삼○○○	4,000	12,200
(주)우○○○○○	4,000	12,200
한○○○○○(주)	4,000	12,200
주식회사 맥○○○○○○○○○○	4,000	12,200
주식회사 디○○○	4,000	12,200
주식회사 계○○○○	4,000	12,200
합 계	40,000	122,000

자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수혜 업체들과 체결한 성과 공유 계약 내용을 보면, 과제의 명칭은 ‘한국전력기술(주) 협력사 ESG 지원사업’이고 성과 목표는 ①ESG 교육 수료율 100%, ②ESG 지표 준수율 개선도 10%p 이상으로 모든 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동일하였다.

[2025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성과공유 계약 내용]

과제명	한국전력기술(주) 협력사 ESG 지원사업
과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 ESG 교육 수료율 100%, 준수율 개선도 10%p 이상 - (정성) ESG경영으로의 전환 및 관련 대외 경쟁력 강화(중소기업) 협력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공사)
성과의 공유	과제목표 달성시 기업당 1,220만원 인센티브 제공

자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에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성과공유제의 목표로 설정한 ‘ESG 교육 수수료율’ 및 ‘ESG 지표 준수율 개선’은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정책적 목적이자 이에 따른 예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될 것이 예정된 결과를 성과공유 과제의 목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 목적에 대한 중복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실제 성과의 크기와 합리적으로 비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협력사 ESG 지원사업비의 세 배에 달하는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성과 대비 과도한 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10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으로 총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과 체결된 성과공유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신규 출원 1건 이상인 경우¹⁴⁾ 기업당 100만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2025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및 성과공유제 현황]

(단위: 천원)

업체명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집행액	성과공유제 집행액
슬○○	5,000	1,000
바○	5,000	1,000
로○○○	5,000	1,000
비○○	5,000	1,000
위○○	5,000	1,000
그○	5,000	1,000
그○○○○	5,000	1,000
정○○○○	5,000	1,000
프○○○	5,000	1,000
해○	5,000	1,000
합 계	50,000	10,000

자료: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대상기관 10개 중 2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출원 2건으로 목표 설정

[2025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성과공유 계약 내용]

과제명	2025년 한전원자력연료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과제 목표	- (정량)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신규 출원 1건 이상 - (정성)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중소기업) 중소 창업·벤처기업의 역량 강화 환경 조성(공사)
성과의 공유	과제목표 달성시 수탁기업에 인센티브(1,000천원) 지급

자료: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은 맞춤형 컨설팅과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본래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신규 출원은 이러한 지원의 직접적이고 예정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1건 이상 출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인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이미 정책적으로 유도된 결과에 대해 다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내용]

프로그램	주요 내용
맞춤형 컨설팅	기업별 니즈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교육(경영, 수출, 노무, 세무·회계, 브랜드·디자인 등)
IP(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계획 설계 및 디자인, 상표, 특허(실용신안) 출원 지원

자료: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025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안)」, 2025. 4.

한국수자원공사는 ‘2025년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사업지원’을 위해 15개 업체에 총 3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동일한 업체를 대상으로 혁신파트너십 관련 성과공유 과제 달성에 대하여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컨설팅 자금지원, 혁신파트너십 사업현황 점검 및 사업 검토, 참여기업의 과제 이행에 대한 종합관리’ 등을 지원하고, 해당 지원을 통해 달성한 목표에 대하여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이는 앞서 검토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원사업의 정책목표를 성과공유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중복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및 성과공유제 현황]

(단위: 천원)

업체명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집행액	성과공유제 집행액
글○○○	21,500	200
무○○○○	21,500	200
스○○○○	21,450	200
천○○○	21,450	200
동○○○	21,450	200
비○○○	20,750	200
신○○○	20,650	200
국○○○○	20,750	200
금○	19,050	200
삼○○○○	20,400	200
태○	19,050	200
비○○○○○	20,750	200
해○○○	20,750	200
대○○○	20,750	200
제○○○○○○○○	20,750	200
합 계	311,000	3,00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소결

상생협력재단은 2012년 성과공유제가 도입된 이후 성과공유 금액이 2025년 기준 1조 1,936억원을 달성하고, 누적 확인 과제가 2만 5천건을 돌파하는 등 제도의 저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⁵⁾. 그러나 성과로 보기 어려운

15) 상생협력재단,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실적보고서」, 2026. 2.

과제 설정, 객관성이 결여된 과제 목표 설정,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이 포함된 실적은 성과공유제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는 제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과공유제 등록기업·확인과제·공유금액 현황]

(단위: 개, 건, 억원)

구분	2012~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등록기업	499	539	576	598	615	630
대기업	110	111	116	118	121	129
중소·중견기업	176	185	200	208	210	210
공공기관	213	243	260	272	284	291
참여수탁기업	10,548	12,833	15,152	17,545	19,647	21,991
확인과제	9,304	11,471	14,389	17,836	21,093	25,537
공유금액 (순증)	26,178	31,427 (5,249)	41,499 (10,072)	49,049 (7,550)	59,820 (10,771)	71,756 (11,936)

주: 2025. 12. 31. 누적 기준

자료: 상생협력재단,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실적보고서」, 2026. 2.

이와 같이 성과공유제가 내실 없이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위탁·수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현금·현금성 공유 유형에 대해 동반성장평가상 우대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성과공유제의 확대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공유 과제의 질적 수준과 성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성과공유제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의미한 성과의 창출과 공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제의 전반을 관리하는 추진본부는 제도의 전 과정에 대한 등록·확인 및 심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단순한 형식적인 요건검토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이 신청한 과제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6) 관계부처합동,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2026. 1. 21.

나.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1)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 간 중복지원 사례

일부 공공기관이 동일 연도 내 특정 기업에 다수의 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상생협력기금이 일부의 기업에 집중될 경우 상생협력기금의 취지인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지원 확대와 동반성장 효과의 폭넓은 확산’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업체를 보면, 9개의 업체가 3개 이상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4개의 업체는 5개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고, 2개의 업체가 4개의 사업, 3개의 업체가 3개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았다.

[202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중복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업체명 (지원 사업 수)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주식회사 웨○○○○○○○ (5)	상생형 창업 벤처기업 지원사업	25,000
	협력사 ESG 지원사업	5,000
	민간자율기획사업:장기재직자 지원사업	1,000
	민간자율기획사업: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27,539
	성과공유제	600
	합 계	59,139
인○○○○○○○(주) (5)	민간자율기획사업: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구축지원사업	14,125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복지증진사업(문화비)	1,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성수기 격려지원사업	592
	민간자율기획사업: 장기재직자 지원사업	1,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726
	합 계	17,443
이○○○○○(주) (5)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복지증진사업(문화비)	640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복지증진사업(휴가비)	1,486
	민간자율기획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9,800
	민간자율기획사업: 장기재직자 지원사업	1,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726
	합 계	13,652

(단위: 천원)

업체명 (지원 사업 수)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주)시○○○○ (5)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20,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 복지증진 사업(문화비)	1,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성수기 격려지원사업	536
	민간자율기획사업: 장기재직자 지원사업	1,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1,000
	합 계	23,536
사단법인○○ (4)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 복지증진사업(문화비)	800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 복지증진사업(휴가비)	1,500
	민간자율기획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9,097
	민간자율기획사업: 장기재직자 지원사업	1,000
	합 계	12,397
(주)삼○○○ (4)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20,000
	협력사 ESG 지원사업	5,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스카트공장사후 관리리부트 지원사업	7,000
	성과공유제	300
	합 계	32,300
에○○○○○ 유한회사 (3)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20,000
	협력사 ESG 지원사업	5,000
	성과공유제	300
	합 계	25,300
벨○○○○ (3)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복지증진사업(문화비)	250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복지증진사업(휴가비)	600
	민간자율기획사업: 성수기 격려지원사업	180
	합 계	1,030
(주)에○○○○ (3)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복지증진사업(문화비)	118
	민간자율기획사업: 중소기업복지증진사업(휴가비)	1,494
	민간자율기획사업: 성수기 격려지원사업	149
	합 계	1,761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 2025년 6개의 업체가 3개 이상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았다. 이 중 5개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가 1개, 4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가 1개, 3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가 4개에 달했다.

2024년에도 여러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이○○○는 2025년에 5개의 사업에 대하여 1억 5,241만원, 2024년도에 2개의 사업에 대하여 3,100만원을 지원받았다.¹⁷⁾

[2024~2025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중복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업체명 (지원 사업 수)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2025	이○○○ (5)	민간자율기획사업: 해외시장개척단	40,438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95,000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8,972
		협력사 ESG 지원사업	7,500
		성과공유제	500
		합 계	152,410
	일○○○○○ (4)	민간자율기획사업: 해외시장개척단	40,438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20,000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8,972
		협력사 ESG 지원사업	7,500
		합 계	76,910
	에○○○○○ (3)	민간자율기획사업: 해외시장개척단	40,438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8,972
		협력사 ESG 지원사업	7,500
		합 계	56,910
	파○○○○○ (3)	민간자율기획사업: 해외시장개척단	40,438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20,000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8,972
		합 계	69,410

17)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각 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특정 기업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과 별개로, 유사한 역량을 가진 다른 기업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사업별 요건 충족 여부만을 근거로 일부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기금 운용 전반에서 지원 편중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단위: 천원)

연도	업체명 (지원 사업 수)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2025	한○○○○ (3)	민간자율기획사업: 해외시장개척단	40,438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40,000
		성과공유제	500
		합 계	80,938
	유○○○ (3)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40,000
		협력사 ESG 지원사업	7,500
		성과공유제	500
		합 계	48,000
2024	리○○○ (4)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95,000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20,000
		PR챌린지	20,000
		성과공유제	500
		합 계	135,500
	삼○ (3)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40,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수출지원	11,368
		성과공유제	500
		합 계	51,868
	이○○○ (2)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20,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수출지원	11,368
		합 계	31,368

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25년 5개의 업체가 각각 3개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았는데, 이 중 해○○○과 (주)지○○○○는 2024년에도 각각 4개, 2개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중복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업체명 (지원 사업 수)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2025	드○○○○○○○○(주) (3)	상생형 창업 벤처기업 지원사업	11,970
		민간자율기획사업: AX역량강화	7,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장기재직 포상지원	800
		합 계	19,770
	(주)리○ (3)	민간자율기획사업: AX역량강화	7,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장기재직 포상지원	1,000
		민간자율기획사업: 휴가비지원	300
		합 계	8,300
	대○○○○○○(주) (3)	민간자율기획사업: 수출금융지원	287
		민간자율기획사업: 환경설비개선	10,000
		성과공유제	1,000
		합 계	11,287
	해○○○ ○○○○○○○○ (3)	민간자율기획사업: 환경설비개선	10,000
		민간자율기획사업: 휴가비지원	299
		민간자율기획사업: 수출금융지원	287
		합 계	10,586
	(주)지○○○○ (3)	민간자율기획사업: 기술개발촉진산업	1,500
		민간자율기획사업: 장기재직 포상지원	1,000
		민간자율기획사업: 수출금융지원	287
		합 계	2,787
2024	해○○○ ○○○○○○○○ (4)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20,000
		협력사 ESG 지원사업	5,578
		민간자율기획사업: 휴가비 지원	300
		민간자율기획사업: 근무복지지원	600
		합 계	26,478
	(주)지○○○○ (2)	민간자율기획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4,088
		성과공유제	200
		합 계	4,288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동일 기업이 여러 사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한정된 재원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다른 잠재적 수혜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약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형평성 및 기회균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이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그 지원 효과가 확산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생협력기금이 기존 거래관계나 협력관계에 한정되어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배분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참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가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인책을 설계하는 등 기금 수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동반성장협력대출-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 간 중복지원 사례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사례는 상생협력기금사업 간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사업 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지원한 기업 중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은 업체는 2024년 6개, 2025년 5개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최소 18억원에서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는 동시에,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을 통한 재정지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과 (주)파○○○○○의 경우 앞서 검토한 상생협력기금사업 간 중복지원 업체에 해당하며, 2025년에 각각 5개, 3개의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⁸⁾

18)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사업 각각 재원과 사업내용,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임. 물론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사업이 재원, 운영방식, 법적 근거 측면에서 별개의 제도라는 점은 인정되나, 핵심은 제도 간 형식적 구분이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의 누적 효과에 있음. 기업은 동반성장협력대출의 저리 금융지원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는 것이며, 상생협력기금사업을 통한 지원까지 결합될 경우 결과적으로 공공재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특히 동일 기업이 다수의 기금사업과 대출지원까지 동시에 활용하는 구조는 지원 필요성이 더 높은 다른 중소기업의 기회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제도 간 성격 차이를 근거로 중복지원을 부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원수단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2025년 한국수력원자력(주) 중복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업체명	상생협력기금사업	동반성장협력대출
2024	성○○○○○○	11,000	3,000,000
	우○○○	11,000	3,000,000
	비○○	11,000	3,000,000
	파○○○○	31,000	2,000,000
	화○○○○○	11,000	3,000,000
	코○	40,000	3,000,000
2025	(주)코○	40,000	1,500,000
	에○○○	40,000	3,000,000
	오○○○	95,000	3,000,000
	이○○○	152,000	5,000,000
	(주)파○○○○○	69,000	1,800,000

주: 상생협력기금지원 연도 기준 해당 연도에 동반성장협력대출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신규로 받은 경우
 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도 상생협력기금사업과 동반성장협력대출 간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사례가 확인되었다. 2024년에는 (주)이○○○, (주)정○○○, (주)씨○ 등 3개 기업이 두 사업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에도 4개 기업이 중복 지원을 받는 등 유사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씨○의 경우 동반성장협력대출의 공사 추천 협력기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에서 2026년까지 5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받는 동시에 2024년 창업벤처 지원사업, 협력사 ESG 지원사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총 1,674만원을 지원받았고, 2025년에도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창업벤처 지원사업,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2,7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2024~2025년 한국철도공사 중복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업체명	상생협력기금사업	동반성장협력대출
2024	(주)씨○	16,743	500,000
	(주)이○○○	14,500	200,000
	(주)정○○○	5,500	400,000
2025	(주)씨○	27,000	500,000
	(주)세○○○○	62,000	200,000
	(주)디○○○○○	12,000	210,000
	(주)에○○	24,218	342,000

주: 상생협력기금지원 연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동반성장협력대출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신규로 받은 경우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도 특정 업체에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2024~2025년 동안 5개의 업체가 3억~1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저리의 혜택을 받은 동시에 상생협력기금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중복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업체명	상생협력기금사업	동반성장협력대출
2024	(주)웨○○○	2,000	1,000,000
	스○○○○○○○○○○	2,000	500,000
	신○○○○○	1,200	500,000
2025	신○○○○○	1,200	500,000
	유○○○○	48,000	300,000

주: 상생협력기금지원 연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동반성장협력대출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신규로 받은 경우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중복지원 사례는 동일 기관이 동반성장정책 전반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 복합적·집중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부 특정 기업이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한 저리 자금 지원과 상생협력기금사업을 통한 추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다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이 동일 연도에 다수의 사업으로 반복적인 혜택을 받는 구조는 한정된 공공자원의 배분이 특정 기업군에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상 기업군의 범위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기업이 선정되는 현상은 정보 접근성이 높거나 기존 거래 관계를 보유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제한된 기업군 중심의 참여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상생협력기금의 목적이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신규 기업과 참여가 저조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수혜 대상 발굴 노력을 통해 정책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상생협력기금사업과 동반성장협력대출 등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수단이 일부 기업에 중복·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한정된 재원이 특정 기업군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신규 기업의 진입 기회를 제약하여 형평성과 기회 균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기금의 취지인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동반성장 효과의 확산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복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의 다변화·신규 참여 기업 발굴 및 참여 유인 설계를 통해 보다 폭넓은 기업이 정책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 민간자율기획사업 재원의 균형적 배분 필요

(1) 민간자율기획사업 개요

민간자율기획사업이란 출연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상생협력활동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말한다. 민간자율기획사업은 출연기업이 자사 산업의 특성과 협력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민간자율기획사업의 비중을 보면, 2021년 12.8%에서 2025년 18.4%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자율적인 사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자율기획사업의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 공 기 관	민간자율기획사업	69 (12.8)	54 (13.6)	46 (13.2)	56 (17.5)	72 (18.4)
	민간자율기획사업 이외의 사업	470 (87.2)	343 (86.4)	300 (86.7)	265 (82.5)	322 (81.6)
	합계	539 (100)	396 (100)	346 (100)	321 (100)	394 (100)
전 체	민간자율기획사업	2,486 (67.5)	3,165 (72.5)	2,799 (72.3)	1,489 (64.1)	1,923 (70.4)
	민간자율기획사업 이외의 사업	1,197 (32.5)	1,198 (27.5)	1,071 (27.7)	835 (35.9)	807 (29.6)
	합계	3,683 (100)	4,363 (100)	3,870 (100)	2,324 (100)	2,730 (100)

자료: 상생협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상생협력기금 전체에서는 민간자율기획사업이 매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공공기관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선, 민간부문과 공공기관 간 사업구조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

간기업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제품·서비스의 구성 및 공급망 구조도 복합적이어서 산업 특성과 협력사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수행 사업이 고유업무 중심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협력 중소기업과의 거래 구조나 산업 생태계 내 역할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공공기관은 매년 상생협력기금사업의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체계가 사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고 평가 방식이 예측 가능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평가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자율기획사업을 확대하기보다 동반성장평가 지표에 명확하게 포함된 사업유형을 중심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러한 점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자율기획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민간자율기획사업 재원의 균형적 배분 필요

민간자율기획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기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①기술협력 촉진, ②인력교류확대, ③환경경영협력 촉진, ④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⑤생산성 향상, ⑥기술 보호, ⑦창업 지원, ⑧국내·외 판로 확대, ⑨거래 공정화, ⑩동반성장문화 확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민간자율기획사업 지원 내역의 용도별 구분]

용도	구체적 사업 내용
기술협력촉진	· 신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인력교류확대	·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교육으로 자기주도의 지속적 역량 개발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으로 산업별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제공
환경경영협력촉진	·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설팅 및 설비, 인증지원 · 컨설팅비, 설비 구매비, 친환경 인증 비용, 친환경 R&D지원 등

용도	구체적 사업 내용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 채용관련 비용 및 인건비 지원으로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 · 상생격려금, 채용장려금, 채용박람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생산성 향상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스마트공장 구축(설비구입) 지원 · 생산공정의 표준화·자동화로 작업능률 향상 및 자체품질관리 신뢰성 제고
기술보호	·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활용지원 · 기술임치서비스 이용료, 특허법인 수수료특허넷 관납료 등
창업지원	· 창업 벤처 기업 사업화 지원 · 창업공간 지원, 멘토링, 사업아이템 고도화 등
국내·외 판로확대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여, 홍보자료 제작, 제품홍보관 운영 등
거래공정화	· 거래에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특별보증 · 이행(계약, 선급금, 하자)보증보험료, 상생특별보증 등
동반성장문화확산	· 대중소기업 간 근로여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활동 지원 · 건강검진 간담회, 임직원 자녀장학금, 생활(식대·통근), 임차료, 안전설비 등

자료: 상생협력재단 홈페이지(<https://www.win-win.or.kr>),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민간자율기획사업 브로슈어

공공기관이 민간자율기획사업으로 집행한 내역을 용도별로 구분해보면, 2024년의 경우 국내·외 판로 확대에 38.4%의 금액이 집행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22.1%), 동반성장문화 확산(1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이 세 분야가 민간자율기획사업 지원액 전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기관의 분포를 보면,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37 → 39개)과 동반성장문화확산(32 → 34개) 분야에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호(28 → 27개)와 국내·외 판로확대(22 → 26개) 역시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분야로 나타나며, 특히 판로확대 분야는 참여기관 수 증가와 함께 집행액 역시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2024~2025년 공공기관 민간자율기획사업의 용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개)

구분	2024		2025	
	집행액 (비중)	참여 공공기관 수	집행액 (비중)	참여 공공기관 수
기술협력촉진	386 (7.2)	5	290 (3.8)	6
인력교류확대	22 (0.4)	2	25 (0.3)	1
환경경영협력촉진	70 (1.3)	1	155 (2.0)	8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1,179 (22.1)	37	1,280 (16.8)	39
생산성 향상	563 (10.6)	5	425 (5.6)	6
기술보호	159 (3.0)	28	234 (3.1)	27
창업지원	126 (2.4)	8	158 (2.1)	8
국내·외 판로확대	2,048 (38.4)	22	3,985 (52.2)	26
거래공정화	8 (0.2)	1	2 (0.0)	1
동반성장문화확산	770 (14.4)	32	1,081 (14.2)	34
합 계	5,333 (100.0)	141	7,635 (100.0)	156

주: 참여 공공기관 수는 용도 간 중복 있음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간자율기획사업은 공공기관이 기금 용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단순히 정책사업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기관별 네트워크, 산업·지역 특성을 활용해 특화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판로확대 분야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지원이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문화확산 등 근로자 복리증진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해당 분야는 장려금·격려금·포상금 등 주로 근로자의 복

리후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교적 설제와 집행이 용이하고 단기 성과가 가시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시혜성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나 생산성 제고와 같은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복리·후생 중심 사업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지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별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친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자율기획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필요

(1)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개요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에 도입되었다.¹⁹⁾ 상생협력재단의 동반성장 위원회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²⁰⁾을 대상으로 매년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평가는 ①공공기관별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동반성장 실적, ②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 체감도 조사, ③기타 가점·감점 사항 등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다섯 등급으로 구분되어 발표된다.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20) 2025년 기준 평가대상은 134개의 공공기관(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공공기관 46개)임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	단위지표	세부지표	비계량	계량	배점
1	동반성장 전략수립 및 체계	① 추진목표·전략 등의 적정성·구체성 ② 기관의 동반성장 활동 추진 노력 ③ 동반성장 전담 운영체계 구축 여부 ④ 임직원 성과지표 반영 여부 ⑤ 추진실적 보고서 타 기관 공유	비계량 비계량 계량 계량 계량	2.0 4.0 1.0 0.5 0.5	8점
2	공정거래 문화조성 및 확산	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 ②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교육 ③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노력 ④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노력	계량 계량 비계량 비계량	2.0 1.0 3.0 2.0	8점
3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①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활동 노력(1) ②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활동 노력(2) ③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활동 노력(3) ④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활동 노력(4)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3.0 3.0 3.0 3.0	12점
4	기금출연 및 지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 증가율 또는 규모(택일)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집행율 ③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 증가율 또는 규모(택일) ④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집행율 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기관 노력	계량 계량 계량 계량 비계량	2.0 1.0 1.0 0.5 1.5	6점
5	성과공유제도	① 성과공유 과제 등급 ② 성과공유 과제 확인실적 ③ 성과공유 공유실적	계량 계량 계량	1.0 2.0 2.0	5점
6	결제환경 개선	① 상생결제제도 도입 등 실적 ② 상생결제제도 활용실적 증가율 또는 규모(택일) ③ 거래기업의 상생거래 환경조성 및 대금 결제 인식개선 활동 추진 노력	계량 계량 비계량	3.0 3.0 4.0	10점

구분	단위지표	세부지표			배점
7	기술혁신 및 기술보호 지원	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수 및 지원금액 ② 시장확대형-상생협력(공동R&D) 과제발굴건수 ③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 실적 ④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⑤ 기술보호 관련 정부사업 등 참여 ⑥ 기술자료 임차계약 지원 실적	계량 계량 계량 계량 계량 계량	1.5 2.0 1.5 1.0 1.5 1.5	9점
8	중소기업 판로지원	① 신규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실적 ② 동반성장물 거래실적 ③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실적 ④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노력 ⑤ K-전략품목 제품구매 실적 ⑥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실적 ⑦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실적	계량 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계량 계량	0.5 2.0 3.0 1.5 1.0 2.0 2.0	12점
9	상생협력 문화 및 창업 생태계 구성	① 온누리 상품권 구매율 ② 협력(거래)업체 복지증진 노력 ③ 상생누리 신규등록 상생협력 프로그램 수 ④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실적 ⑤ 협력(거래) 중소기업 임직원 훈련·교육지원 실적 ⑥ 창업·벤처기업 지원기업 수 ⑦ 중소기업 ESG 지원실적	계량 비계량 계량 계량 계량 계량 계량	2.0 1.0 1.5 1.0 1.0 2.5 1.0	10점
계량(32개, 49점) + 비계량(12개, 31점)					80점
협력·거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20점
가점(최대 3점)·감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침」

(2)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표 개선 필요

상생협력기금사업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표가 양적인 집행 실적 위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상생협력기금의 사업별 계량지표를 보면, 지원 기업 수, 지원 금액, 지원 실적 등 집행 규모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수 및 지원금액’,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의 경우 ‘창업벤처기업 지원기업 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서는 ‘국내 판로지원 실적’이나 ‘해외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와 같이 사업의 집행 결과를 단순한 수치로 측정하는 방식이 주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의 상생협력기금 사업별 평가 지표]

사업명	평가지표(세부지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상생협력)	· 시장확대형-상생협력(공동R&D) 과제발굴 건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신규 중소기업 국내 판로지원 실적 ·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실적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수 및 지원금액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실적
상생형 창업벤처 지원사업	· 창업벤처기업 지원 기업 수
성과공유제	· 성과공유과제 등급 · 성과공유과제 확인 실적 · 성과공유금액
민간자율기획사업	· 협력(거대)중소기업 임직원 훈련교육지원 실적 · 협력(거대)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지원 실적 · 기술자료 임치계약 지원 실적
협력사 ESG 지원사업	· 중소기업 ESG 지원 실적

자료: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실적 중심 평가지표는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규모나 추진 실적 등 공공기관의 활동 수준은 평가할 수 있으나, 지원이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기업을 지원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 증대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는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지원 활동 자체가 아니라, 지원으로 인해 달성되는 성과와 효과에 있다는 점에서, 현행 평가지표는 투입(input) 중심으로 구성되어, 결과(outcome) 및 영향(impact)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양적 실적 위주의 평가지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보다, 지원 건수나 기업 수 확대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5년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소액의 현금을 다수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공유 과제 건수를 확대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제도가 실적 충족을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경향은 성과공유제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사업 운영이 양적 실적 달성에 치우치면서 정책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기업과 소액의 현금 배분 방식으로 성과공유제를 운영하는 주요 기관 현황]
(단위: 개, 천원)

기관명	성과공유 과제 건수	현금공유액	과제 당 평균 현금공유액
주택도시보증공사	33	23,500	712
인천국제공항공사	26	7,900	304
한국부동산원	23	2,100	91
한국공항공사	21	6,300	3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1,000	100
한국연구재단	10	1,100	11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0	2,200	220

주: 2025년 기준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따라서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표가 단순한 사업수행 실적이나 과제 수 등 양적 집행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지원사업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경영성과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와 효과 중심의 평가체제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생산성 개선률이나 불량률 감소율 등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업의 신규거래처 확보 수나 국·내외 매출 성장률 등,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ESG 인증 획득률이나 ESG지표 개선율 등을 지표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의 한계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해당 공공기관과 실제로 거래·협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동반성장 활동의 만족도와 체감 효과를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체감도 조사는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한다.

이 조사는 공공기관이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협력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며, 거래관계 및 협력관계, 운영체계에 대한 만족도나 지원의 유용성 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체감도 조사 설문 항목]

구 분	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조사문항 (30개)	배점	조사문항 (26개)	배점
거 래 관 계	1. 거래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여부 2. 부당한 납품지연·거절·반품 경험 3. 물품 구매절차 및 방법의 공정한 운영 여부 4. 부당한 특약 등 예방을 위한 공정한 계약절차 이행노력 정도 5.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등 보호를 위한 노력 6.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험 - 해당 사례 선택 7. 원가 상승요인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	50	1. 거래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여부 2. 부당한 납품지연·거절·반품 경험 3. 물품 구매절차 및 방법의 공정한 운영 여부 4. 부당한 특약 등 예방을 위한 공정한 계약절차 이행노력 정도 5.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등 보호를 위한 노력 6.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험 - 해당 사례 선택 7. 원가 상승요인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	70

구 분	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조사문항 (30개)	배점	조사문항 (26개)	배점
	8.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여부 9.납품대금의 적기 지급 노력 10.불공정행위 신고·조정신청 시 부담한 보복행위 경험		8.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여부 9.납품대금의 적기 지급 노력 10.불공정행위 신고·조정신청 시 부담한 보복행위 경험 11.부당한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받은 경험 12.협력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 13.구매입찰 등 정보의 적극적 공개 등 공공기관 사전적인 노력 14.부당한 발주 취소 예방노력	
협 력 관 계	1.작·간접적 자금지원에 대한 유용성 2.공동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유용성 3.연구시설, 시험장비 이용 등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의 유용성 4.협력성과의 합리적 배분의 유용성 5.교육컨설팅 지원의 유용성 6.국내 판로확대 및 마케팅 지원의 유용성 7.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의 유용성 8.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공유·지원의 유용성 9.구매입찰 등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노력의 유용성 10.계약·지식재산권 등록에 필요한 법률·정보 지원의 유용성	30	-	-
운 영 체 계	1.동반성장에 대한 상호 신뢰 및 비전 공유 정도 2.동반성장 담당자의 정책 및 업무 이해 정도 3.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내부조직 구성 여부 4.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20	1.동반성장에 대한 상호 신뢰 및 비전 공유 정도 2.동반성장에 대한 의지 및 의식수준 정도 3.동반성장 담당자의 정책 및 업무 이해 정도 4.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내부조직 구성 여부	30

구 분	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조사문항 (30개)	배점	조사문항 (26개)	배점
	5.협력 중소기업 선정의 공정성 및 절차운영의 합리성 6.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관련 정보 안내 여부 7.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교류회, 설명회 등 운영 여부 8.거래 및 협력관계의 애로사항 청취 시스템 및 반영 여부 9.금품, 향응 또는 각종 편의 등의 수수 요구 경험 - 사례 10.인격적 모독, 일방적 압박 또는 폭언 등을 받은 경험 - 사례		5.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6.협력 중소기업 선정의 공정성 및 절차운영의 합리성 7.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관련 정보 안내 여부 8.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교류회, 설명회 등 운영 여부 9.동반성장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적절한 운영 여부 10.거래 및 협력관계의 애로사항 청취 시스템 및 반영 여부 11.금품, 향응 또는 각종 편의 등의 수수 요구 경험 - 사례 12.인격적 모독, 일방적 압박 또는 폭언 등을 받은 경험 - 사례	

자료: 상생협력재단

체감도 조사는 정책 수혜집단의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설문 을 기반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한 계를 가진다. 체감도 조사는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달리 응답자가 느끼는 인식이나 만족도를 중심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이나 지원을 받았더라도 기업별로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기대수준, 담당자의 경험 등에 따라 체감 수준이 달 라질 수 있으며, 이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의 거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 에 체감도 조사에서 우호적 또는 중립적인 방향으로 응답이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 공공기관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향후 거래 지속여부나 사업 참여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경영활 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응답 기업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직접 추

천하고 있는 현행 운영방식에서는 설문이 익명으로 진행되더라도 중소기업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체감도 조사 결과의 점수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공공기관 간 동반성장 수준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연도별 체감도 조사 결과 점수 분포]

(단위: 개)

점수	공공기관 수				
	2021	2022	2023	2024	2025
90점 이상~100점	8	16	28	44	60
80점 이상~90점 미만	74	116	100	87	74
70점 이상~80점 미만	50	2	6	3	0
70점 이하	1	0	0	0	0
합 계	133	134	134	134	134

자료: 상생협력재단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감도 조사는 동반성장실적 평가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원이 중소기업에 미친 체감 효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평가의 실질적 의미와 변별력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평가항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응답자의 주관성을 완화하고, 표본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표본 수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응답의 편향과 왜곡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체감도 조사가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경험과 만족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의 실효성과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상생협력기금사업의 평가지표는 지원 규모와 실적 등 투입 중심의 양적 지표에 편중되어 있어 상생협력기금사업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나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역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고,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응답 왜곡 가능성 등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평가지표는 투입과 활동 중심에서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체감도 조사 또한 설계를 정교화하는 등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마.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의 기업부담분 지원 문제

(1)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 왜곡 가능성

내일채움공제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동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이후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①내일채움공제, ②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③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 현황]

구분	내일 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 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	청년내일 채움공제 (3년형)	청년내일 채움공제 (2년형)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청년근로자 내일채움 공제플러스
가입 기간	3년이상	3년	3년, 5년	3년	2년	5년	3년
가입 대상	기업	중소·중견 기업	중소 기업	중소·중견 기업	중소· 중견기업	중소 기업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근로자	제한 없음	청년내일 채움공제 만기 청년재직자	제한 없음	청년 재직자	청년 재직자	청년 재직자
납입 금액	근로자(1): 기업(2이상) (월최소 34만원)	청년:기업 각14만원	근로자(1): 기업(0.2)	청년 600만원(1): 기업 600만원(1): 정부 1,800만원(3)	청년(1): 기업(1): 정부(1) 각600만원	청년 720만원(1): 기업 1,200만원(1.67): 정부 1,080만원(1.5)	청년(1): 기업(1): 정부(1) 각600만원
가입 종료	계속	계속	계속	2020	2023	2022	2023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사업주가 일정 부분의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근로자의 장기 재직 여부를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기업의 책임 영역으로 일부 귀속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납입금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분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은 상생협력기금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주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으로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지원하는 주요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천원)

기관명	기금 지원 사업명	지원업체 수	지원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일채움공제	19	61,1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	
여수광양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7	24,8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4	
울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7	19,200
인천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7	18,0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내일채움공제	2	13,7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	
부산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8	9,800
국가철도공단	내일채움공제	5	9,46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	
한국농어촌공사	내일채움공제	6	7,86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일채움공제	1	7,48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일채움공제	4	6,000
	청년내일채움공제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	1,400

주: 2025년 기준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 있는 참여를 전제로 한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러한 지원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납입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근

로자의 장기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따르는 기업의 의지와 노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부담으로 기업부담금을 전액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기업에 한해 기업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상생협력기금으로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기관의 협력사나 기관과 업종 연관성이 밀접한 업체를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일부 기업군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선정기준]

기관명	지원 대상 선정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참여 기업 - 업태가 건설업, 부동산업인 중소기업 등
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 중소기업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부산 경남 소재의 중소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 순천, 광양 소재 중소기업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 협력 중소기업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 협력기업
국가철도공단	- 철도설계 중소기업, 공단 협력 중소기업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공기관에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부담분 지원 참여를 독려한 것은 성과가 부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공공기관의 기금을 투입하여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일채움공제 관련 사업은 그동안 사업평가 과정에서 신규가입자 수 감소, 높은 중도해지율, 목표 대비 가입실적 미달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²¹⁾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기관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기업부담금 지원은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단기적 조치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1) 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
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따라서 내일채움공제가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상생협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업종에 한해 기업부담금을 지원하되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원하거나 납입기간 중 일정 기간에 한해 지원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기업의 자부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폭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협력사 위주의 지원에서 비협력사까지 포함하는 등 상생협력 생태계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²²⁾ 이에 따라 선정기준이 특정 협력사나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정책지원의 공정성과 포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전반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정책 취지 고려 필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휴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여 적립금을 만들어 주고, 이 적립금을 지정된 온라인몰에서 국내 숙박, 교통, 관광상품, 체험·레저 등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주체별 적립 금액]

(단위: 원)

구분	근로자	기업	정부	합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200,000	100,000	100,000	400,000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200,000	150,000	50,000	400,000

자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vacation.visitkorea.or.kr>)

22) 관계부처합동,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2026.1.21.

한국관광공사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여 협력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은 상생협력기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기업부담분만을, 일부 기관은 기업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부담금을 지원하는 주요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천원)

기관명	기금 지원 내역			지원업체 수	지원금액
	기업부담분	근로자부담분	정부부담분		
부산항만공사	100	100	-	12	11,933
(주)강원랜드	100	-	-	3	15,866
인천국제공항공사	100	200	-	7	8,979
울산항만공사	100	100	-	8	5,38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00	50	-	9	5,239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00	50	-	3	4,324
주택관리공단(주)	100	200	-	6	3,000
해양환경공단	100	-	-	7	1,399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이러한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기업의 자발적 복지 확대와 책임 있는 참여라는 정책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에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상생협력기금으로 기업부담금을 대신 전액 부담하는 경우, 기업은 실질적인 부담 없이 소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근로자의 휴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기업만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업부담금을 면제받는 방식은 기업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

참여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라는 정책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기보다는 일정 비율에 한해 부분적으로 지원하거나, 초기 참여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이 후에는 기업이 자체 부담을 통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형평성 측면의 개선을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3) 소결

내일채움공제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기업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의 자발적 책임과 역할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기업에 한정된 지원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활용되어야 하며, 지원수준 및 대상선정 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정책 목적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전환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그 주요 수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생협력기금이 중소기업 생태계 확산과 상생협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과공유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공공기관에서 통상적인 용역계약의 이행 결과를 성과로 간주하거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과제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되는 결과를 성과공유 과제의 목표로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공유제가 과제의 질적 수준과 성과 창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유의미한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추진본부의 등록 및 검증 역할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둘째, 상생협력기금과 동반성장협력대출 등 유사한 목적의 정책이 특정 기업에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사례는 제한된 재원이 일부 기업군에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 진입 기업의 기회를 제한하여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기금의 목적인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동반성장 효과의 확산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원 대상 범위를 다양화하고 중복 지원 관

리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신규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민간자율기획사업이 국내·외 판로확대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문화 확산 등 근로자 복리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는 단기적·시혜적 성과는 도출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자율기획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 수준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별 역할과 전문성을 활용한 중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획·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생협력기금사업을 평가하는 지표가 투입 중심의 양적 지표에 치중되어 있어, 기금사업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경영성과 개선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며,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응답 편향 가능성 등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지표는 현행의 단순한 투입 및 활동 중심에서 성과와 정책 효과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설계의 정교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기업부담분을 지원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발적 책임과 역할을 전제로 하는 정책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일부 기업에 한정된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활용되어야 하며, 지원수준 및 대상선정 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정책 목적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을 중심으로 -

발간일 2026년 5월 8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에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 · 2672 · 1535)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6788 · 3782)

ISBN 979-11-6799-248-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